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책임 연구원 : 이선형(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위촉 연구원 : 기나휘(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연구원)



발 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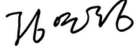
서울시 한부모가족은 전체 가구의 1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이혼, 비혼출산 등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생계와 돌봄을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주거가 불안정한 한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시설을 비롯하여, 상담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부모의 연령, 생애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한 한부모 당사자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많은 한부모들은 공동 생활 시설보다는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주거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임신·출산기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가 있는 한부모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 한부모 당사자들의 시설 운영 참여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안, 이용시설의 확충, 주거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설문 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심층 면접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분들에 감사드리며, 연구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연구가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을 비롯하여 한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Contents

I 서론 _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5
1) 문헌 연구	5
2)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6
3) 전문가 자문	6
3. 연구 추진체계	7

II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현황 분석 _ 9

1. 선행연구 검토	11
1) 한부모가족 연구에서 지원시설 관련 연구	11
2)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연구	12
2. 서울시 한부모가족 현황	15
3. 정책 현황 분석	19
1)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현황	19
2)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예산	29
3)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33

Ⅲ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설문조사 _ 43

1. 조사 목적 및 개요	45
2. 당사자 설문 조사 주요 결과	47
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47
2)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여부 및 과정	50
3)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만족도 및 평가	54
4)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60
5) 한부모가족 단계별 정책 수요	65
3. 시설장 서면 조사 주요 결과	73
1) 시설 현황	73
2) 일가족양립지원제도, 주52시간 도입 관련 시설 대응	75
3)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	76
4) 시설 환경	77
5) 지원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및 평가	78
6)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83
4. 요약 및 시사점	86

Ⅳ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면접조사 _ 91

1. 조사 개요 및 목적	93
2. 면접 조사 주요 결과	97
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만족도 및 평가	97

2) 생활시설 이용 경험 및 개선 의견	100
3) 주거 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필요	108
4) 한부모가족 초기 집중 지원 필요	114
5)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19
6)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	123
7) 한부모 당사자 조직화 및 네트워킹 지원	128
3. 요약 및 시사점	129

IV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_ 133

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 방향	135
2.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관련 세부 과제	136
1) 한부모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36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138
3) 한부모가족 주거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139

Abstract_143

참고문헌 _ 146

부록 _ 149

Table Contents

표 목차

표 I-1	연구의 추진체계	7
표 II-1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14
표 II-2	서울시 자치구 한부모가족 분포현황(2018)	17
표 II-3	연도별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2011~2020)	18
표 II-4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현황(2020. 12. 말 기준)	19
표 II-5	미혼모·부 초기 지원	21
표 II-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정의	22
표 II-7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3
표 II-8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연장가능기간)	24
표 II-9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율(2020)	26
표 II-10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	27
표 II-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28
표 II-12	서울시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현황	29
표 II-13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예산 현황(2020)	30
표 II-14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현황(2012~2020년)	32
표 II-15	시설 유형별 서비스 내용	33
표 II-16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2021)	34
표 II-1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2021)	35
표 II-18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급여	36
표 II-19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 임대	36
표 II-20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37
표 II-21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나는 가장이다'	37
표 II-22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38
표 II-23	한부모가족 희망·내일키움 통장	39
표 II-24	한부모가족 취업 및 창업교육지원	39
표 II-2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지원	40
표 II-26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상담 서비스	40
표 II-2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41
표 II-28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42
표 II-29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42

표 III-1	설문 조사 개요	46
표 III-2	시설장(사무국장) 서면조사 개요	47
표 III-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8
표 III-4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	49
표 III-5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여부	49
표 III-6	현재 받고 있는 지원(중복 응답)	49
표 III-7	지원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하지 않는 이유	51
표 III-8	과거에 이용한 적 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	52
표 III-9	현재까지 이용해본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유형	52
표 III-10	현재까지 이용해본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53
표 III-11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53
표 III-12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시 만족도가 높은 사업 1·2순위	54
표 III-13	서비스가 삶에 도움이 된 정도	56
표 III-14	지원시설 서비스 중 다음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58
표 III-15	시설 유형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인권 침해 등 경험	59
표 III-16	시설 유형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인권 침해 등 경험	60
표 III-17	지원시설 기능과 역할 중 다음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62
표 III-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차이 인지 정도	63
표 III-19	생활시설 구분 필요성	64
표 III-20	혼인지위 별 가장 어려웠던 시기	66
표 III-21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	66
표 III-22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	67
표 III-23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68
표 III-24	혼인지위 별 가장 어려웠던 시기	69
표 III-25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	69
표 III-26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	70
표 III-27	지난 1개월간 가족들과 연락한 정도	71
표 III-28	자녀의 비양육부모 양육비 지급 여부	71
표 III-29	한부모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1·2·3순위	72
표 III-30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면조사 응답현황	73
표 III-31	시설 운영 주체 및 정원·현원 현황	74
표 III-32	시설 인력 현황	74
표 III-33	도입한 제도 및 활용 현황	76

Table Contents

표 III-34	시설 종사자 근로 현황	76
표 III-35	지원시설 환경 관련 어려움 정도	78
표 III-36	제공 중인 서비스 현황	79
표 III-37	다음 항목에 대한 순위	80
표 III-38	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관련 어려움 정도	80
표 III-39	다음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	83
표 III-40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84
표 III-41	한부모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1·2·3순위	85
표 III-42	시설장 설문조사 주요 결과	85
표 IV-1	면접조사 개요	93
표 IV-2	면접 조사 응답자 분포	95
표 IV-3	면접 조사 응답자 개별 특성	96
표 V-1	수요맞춤형 주택 유형 및 내용	140
표 V-2	지원주택 유형 및 내용	141

그림 목차

■ 그림 II-1	서울시 한부모+미혼자녀 가구 분포(2018)	16
■ 그림 II-2	가구유형별 소득 현황(2019)	17
■ 그림 II-3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안내	25
■ 그림 II-4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2015-2020)	31
■ 그림 III-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추천 사업	55
■ 그림 III-2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가 삶에 도움이 된 정도(시설 유형별)	57
■ 그림 III-3	지원시설 서비스 중 다음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58
■ 그림 III-4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중 중요한 서비스	61
■ 그림 III-5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만족도(1순위)	61
■ 그림 III-6	지원시설 서비스 중 다음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62
■ 그림 III-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차이 인지 정도	63
■ 그림 III-8	생활시설 구분 필요성	64
■ 그림 III-9	한부모 이후 시기별 가장 어려웠던 시기	65
■ 그림 III-10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68
■ 그림 III-11	지원시설 환경 관련 어려움 정도	78
■ 그림 III-12	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관련 어려움 정도	81
■ 그림 III-13	향후 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개선 방향	82
■ 그림 III-14	향후 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개선방향	84

연구요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한부모들이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대두
 - 최근 들어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의 서비스가 한부모가족의 다양성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청소년 한부모의 등장과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 적극적인 비혼 출산 한부모, 집단적인 공동생활보다는 개별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한부모들은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 머물기보다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대두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관점의 검토 필요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은 이용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곳이며, 생활시설은 정원 대비 입소율이 서울시 기준으로 70%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 양육수당 및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지원이나 이는 비혼 임신 및 출산, 사별, 이혼 등 한부모가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에 본 연구는 생활시설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미혼모자거점기관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이용자 경험을 토대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당사자 설문조사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표 1 】 설문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조사 기간	2021년 6월~8월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 128명 * 260명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지원시설 이용경험이 없거나, 결측치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총 128명 유효표본으로 분석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종류,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지원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 및 추천하고 싶은 사업: 주거, 교육, 상담, 돌봄, 문화, 후원 등 -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 및 평가 - 지원시설 이용 시 인권 침해 경험 - 복지시설 종류 및 유형에 대한 이해도 - 한부모가 되는 과정 및 자녀 연령 기준 어려운 시기 및 이유, 대응 방법 - 비양육 부모 및 원가족 연락 빈도, 양육비 지급 여부, 긴급 돌봄 사유 발생 시 도움 -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 및 종류 -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근로 여부 및 형제, 자녀 수 및 학령

○ 시설장 서면조사 및 간담회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시설장 및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서면조사 및 간담회를 진행함.

【 표 2 】 시설장(사무국장) 서면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
조사 기간	2021년 6월~8월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서면 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시설장(또는 사무국장) 19명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특성: 시설 유형, 소속, 직위, 성별, 학력 등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현황: 운영 주체, 설립 연월일, 정원 및 현원, 이용자 수, 면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인력 현황 -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 및 활용 여부, 당직 및 휴일, 초과근로 현황 -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제도 여부 - 지원시설 운영 인력 어려움 - 시설 환경 측면의 어려움 - 예산 구조(보조금, 법인부담금, 후원금 등) -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어려움, 서비스 개선방향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 - 한부모가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등
--	--

○ 면접조사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 3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표 3 】 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조사 기간	2021년 2월~8월
조사 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 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 33명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생애 이력 (결혼, 출산, 이혼 등) - 가족 관계: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원가족 관계, 현재 가구 구성, 자녀와의 관계 등 - 노동 이력: 현재 일 경험, 코로나 시기 일과 돌봄 대처 방식 - 주거 현황: 현재 주거 환경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종류 및 경험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시 인권침해 경험 및 목격 유무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및 정책 수요

□ 설문조사 연구 결과

○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와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여부

- 이혼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비혼 출산이 37.5%, 이혼 소송 중 별거 6.3%, 사별과 기타가 3.9%, 가정 폭력으로 인한 별거가 3.1% 순으로 나타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가 83.6%,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14.8%, 모르는 경우 1.6%로 나타남.

○ 지원시설 이용 여부 및 과정

-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30.2%(62명), 이용한 적 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32.2%(66명),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37.6%(77명)로 나타남.
- 시설 이용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공동생활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들이 이용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유형은 이용시설이 45.3%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5.2%,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모두 이용해본 경우가 19.5%였음.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만족도 및 평가

-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 1순위는 주거가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는 물품 등의 후원이라는 응답이 26.0%로 나타남. 주거 서비스 이외에 생활 물품 지원 등과 같은 후원에 대한 만족도가 2순위로 나타난 것은 구체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지원시설에서 받은 서비스가 삶의 각 영역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한 결과, 자녀 돌봄이 3.47점, 안정적인 주거 3.45점, 경제적 자립이 3.43점으로 높게 나타남.
-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개선 방향과 관련한 의견 조사에서는 ‘서비스 개발에 한부모가족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이 3.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한부모가족 지원시

설 서비스 개선 방향에 있어 당사자 의견 반영 및 주거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함.

- 시설 이용 시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경험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 당사자 의견 수렴 부재'가 2.59점으로 가장 높고 원하지 않는 종교 활동 강요 항목이 1.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당사자)

- 지원시설 이용자들이 시설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독립적 주거 공간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지원시설 서비스 만족도에서 주거와 후원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한부모들의 실질적인 자립, 인권 보장, 거주 공간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생활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항목이 3.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3.12점으로 가장 낮았음.
- 또한 미혼모와 한부모가 거주하는 생활시설이 구분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이의 응답자(49.2%)가 아니라고 응답했고 자녀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63.3%)고 응답함.

○ 한부모가족 단계별 정책 수요

- '한부모가 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이 같은 결과는 한부모 지원에 있어 초기 집중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를 물어본 결과, 1순위는 '경제적 빈곤'(53.1%)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자녀 돌봄 및 교육'(34.4%)이었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물어본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봄'인 것으로 확인됨.
-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물어본 결과, '자녀가 학교에 가

기 전'이 5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돌봄을 혼자 수행해야 하는 한부모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혼 출산 또는 이혼의 과정을 겪는 시기 자체가 자녀 연령이 어릴 때와 겹치기 때문으로 보임.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를 물어본 결과, 1순위는 '경제적 빈곤'(53.9%)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자녀 돌봄 및 교육'(43.8%)이었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물어본 결과, 1순위는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봄'(52.3%)이었으며 2순위는 '친구 및 가족에게 도움을 청함'(28.9%)이었음.

-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1순위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이 3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일·가족양립지원제도, 주 52시간 도입 관련 시설 대응

- 생활시설 특성상 현재 인력 구조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의 경우,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 돌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24시간 인력 상주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됨. 이와 함께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서비스 공백을 초래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옴.

○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 종사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도 제기됨.
- 첫째, 인력의 부족으로 고충 처리에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고, 둘째, 생활시설의 특성상 운영진 입장에서는 생활인들 간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데 있어 어려움 등이 있었음.

○ 시설 환경

- 시설장 및 사무국장에게 지원시설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하다는 응답이 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리적 접근성이 낮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1.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원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현황 및 평가

- 시설별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이 4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과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정보제공'으로 각각 28.6%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가장 확대가 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부모 당사자 교육 지원'이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더불어 한부모가족 유형별, 시기별, 자녀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즉 한부모가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한부모 및 자녀의 건강, 연령 등 한부모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임.
- 향후 지원시설에서 서비스 제공 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4.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내용의 다양해져야 한다' 4.32점,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 4.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 당사자들의 결과와는 대조되는 결과임.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시설장)

- 시설장 의견에서도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한부모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생활시설은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생활시설은 단기

-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항목은 2.81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앞서 당사자 조사에서는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당사자와 운영진 사이에 지원시설에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1순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 57.9%으로 나타나 한부모 당사자와 시설 운영 인력 모두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을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임.

□ 면접조사 연구 결과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만족도 및 평가

-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취업을 통해 이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며 시설 거주 기간이 끝났을 때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이야기하였음.
- 한부모들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치유를 받기도 함.

○ 생활시설 이용 경험 및 개선 의견

-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면접조사 결과, 많은 한부모들이 현재 시설 운영 구조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함.
- 한부모들의 취약함은 그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무시와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함.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한부모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더 불편을 감내해야 할 수 있으며 중국에

는 퇴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모자원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독립적인 거주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함. 사생활 침해의 내용에는 개별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 공간을 함부로 들어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부모의 가정생활에 대한 간섭과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도 포함되어 있었음.

○ 주거 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필요

- 생활시설을 이용한 한부모들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으나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시설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이 확대되는 것을 선호함.
- 주거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임대주택 확대와 동시에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뿐만 아니라 긴급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함.
- 한편 주거 정책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기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한부모가족 초기 집중 지원 필요

-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을 이용한 한부모들 중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알게 되어 임신 중단, 출산 및 양육, 입양 등의 선택지를 두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출산 및 입양의 선택지만이 남아 미혼모 기본생활을 이용하게 된 경우가 있었음. 임신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자립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한부모에게 시설에서의 경험은 그 이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면접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적다는 점을 이야기함.
- 응답자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경험, 주변에 여전히 모르고 있는 동료 한부모들이 많다는 점을 이야기함.
- 특히 많은 한부모들이 동주민센터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한부모가족 관련 정보 및 지원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함.

○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응답자들은 지원시설의 서비스가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활시설에 머무는 동안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가 집중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는 생활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거주 한부모에게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응답자도 있었음.
-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으나 실제 한부모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은 많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시설에 거주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차별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됨. 한편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한부모 당사자 조직화 및 네트워킹 지원

- 현재 한부모 조직 가시화를 비롯하여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한부모 모임 또는 단체 네트워킹 형성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표 1 】 면접조사 주요 결과 요약

영역	시사점
시설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주거 공간 확보 되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부족함 보호와 관리의 대상보다는 공동체 주민으로서 존중이 필요함 시설 운영에 당사자 의견 반영 적극적으로 필요함
주거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신설 및 추가, 커뮤니티 공간 및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는 공동주택 필요 주거 및 생활자금 등이 지원되는 긴급 지원 필요 자녀 연령 기준 검토 필요, 자립을 위한 주거 로드맵 교육 필요
초기 집중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된 여성의 임신·출산 지원 기능 강화 비혼 출산에 대한 달라진 인식 반영 필요 폭력 피해 한부모여성 집중 지원 필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 사각지대 없도록 이용시설 확충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정책 역량 강화 필요 병원, 학교, 1366 등 기타 유관기관 연계 강화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한의 자립 비용 확보를 위한 탈수급 유예기간 필요 집중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지원 강화: 장애·질병 등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 정책 제안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향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가 생활시설 중심으로 전달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현재 생활시설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립·상담·교육·후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규정과 더불어 전체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가 필요함
- (집중 지원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일반적인 주거 공간 제공 시설보다는 집중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가 필요함. 집중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기 여성, 장애·질병 가족 돌봄 한부모, 폭력피해 한부모 등이 될 수 있음.
- (주거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가능한 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필요

○ 한부모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이용시설 확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개선만으로는 한부모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거 서비스 교육 및 정보제공, 지역별 주거 서비스 공급 상황에 맞는 정보 적시 제공, 자조 모임 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역 내 한부모가족 거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원스톱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 한부모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영역의 공공 서비스는 한 부서에만 국한되지 않음. 주거, 건강, 돌봄, 일자리 등의 공공 서비스를 한부모가족 상황에 맞도록 발굴하는 전담인력이 필요함.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연계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 제안함.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의료·건강 전달체계와의 협업 강화) 배우자 및 원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한부모는 임신기에서부터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함. 이에 약국 및 병원을 통해 위기 임신·출산 지원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 (한부모 지원 서비스에 따른 시설 유형 구분 필요) 혼인 경험 유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구분이 아닌 집중 지원 서비스 유형별 구분이 필요함. 예를 들어 임신·출산기 지원, 폭력 피해 지원, 장애 아동 돌봄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집중 서비스 제공 필요함.
- (일시긴급지원 시설 확대)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중에서 일시긴급지원 시설은 서울시에 1개소만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함. 폭력피해를 경험한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과 돌봄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시설 확대가 필요함.

○ 한부모가족 주거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 (한부모가족 주거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기존 주거복지정책에서 한

부모가족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기준이 개선되어야 함. 예를 들어 임대주택 지원 기준에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로 자녀 연령 기준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주거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한부모가족 지원주택 신설)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돌봄이 한 공간에서 제공될 수 있는 지원주택 신설이 필요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추진 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부모가족 정책에서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일찍이 한국전쟁 직후 “전쟁미망인과 고아”를 위해 설립된 ‘모자원’과 미혼모들의 출산과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미혼모 시설’이 있어왔고 지역사회 거주하는 한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들이 있다. 생활시설 이외에 한부모가족을 일차적인 정책 대상으로 하는 지원시설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다. 서울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시차원에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하여 교육, 상담 등 지역사회 거주하는 한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시설이 한부모가족의 다양성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청소년 한부모의 등장과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 적극적인 비혼 출산 한부모, 집단적인 공동생활보다는 개별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한부모들은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 머물기보다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2020. 11. 16)에서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의 입주 자격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로 완화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시설 중심의 한부모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¹⁾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실질적인 자립으로 연결되지 않는 서비스

등이 문제시되었다.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거주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한부모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미혼모와 한부모를 적극적인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요보호 여성’으로 여기고 이들에 대한 시설 ‘보호’를 당연시 여겼던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송다영, 2012; 황정미, 2001; 오진방, 2020; 김호수, 2020).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연구 및 정책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논의 속에서 아동을 돌보는 한부모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²⁾ 중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규모는 전체 한부모가족 수에 비해 매우 적기도 하다. 2018년 기준 미혼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서울시 한부모 가구 수는 385,241가구로 전체 가구의 10%이며, 이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을 받는 저소득한부모가구는 34,824가구로 전체 한부모가족의 9%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가구는 109가구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0.3%에 해당한다(서울시 내부자료, 2020).³⁾ 여기에 더해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의 정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70%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때 한부모가족 지원시설로서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시설의 기능과 역할, 이 곳에서

1) https://hanbumonet.com/bbs/board.php?bo_table=m_notice&wr_id=144&page=2&me_code=3030 성명
에 참여한 단체는 아래와 같음.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지원센터 대전
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한부모가족
회한가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가족구성권연구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경남
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금천주거복지센터, 대구여
성회, 미혼모협회아임맘, 부산여성단체연합, 사회복지연구소물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북여성단체
연합,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평화여성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성인지네트
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상담소도 해
당되지만, 한부모가족상담소에는 별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미성년자녀
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아닌 혼인지위, 즉 미혼자녀를 기준
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현재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쉽지 않다(김혜영 외, 2015).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한부모가족 당사자 조직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한부모 지원 정책을 위한 자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서비스 측면에서 보자면, 앞에서 언급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외에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장 많은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 양육수당 및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지원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 역시 비혼 임신 및 출산, 사별, 이혼 등 한부모가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일·생활균형, 건강, 돌봄, 자립 등과 관련된 정책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강은애, 2020, 송이은, 2018, 김영정, 2017) 이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반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과 관련된 정책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입양기관이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입양을 막고 한부모 여성들의 직접 양육을 지원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임신 인지 이후 임신 종결, 출산, 양육, 입양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대한 지원은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생활시설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미혼모자거점기관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이용자 경험을 토대로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정책 수요와 생활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한부모가족 연구에서 지원시설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도출에 참고하였다.

또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정의되어 있는 유형별 지원시설 현황을 비롯하여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서울시 가족정책 전달체계에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검토하였다.

2)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현황과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향후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현재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용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지원시설 이용 경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면접조사 참여 의향을 밝힌 한부모와 한부모가족 카페 및 단체를 통하여 모집하였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해 시설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서면조사는 현재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및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조사하였다. 서면조사는 총 19부가 회수되었다.

3) 전문가 자문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이해 당사자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I-1】 연구의 추진체계

단 계	주요 내용		
1단계 계획 및 설계	시행계획서 작성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 등 계획 수립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내용 도출
	착수자문회의 개최	- 학계 및 현장전문가, 서울시 의견 청취 - 연구 방향 및 방법, 내용의 적절성 검토	
2단계 자료 분석	선행연구 검토	- 이론적 자원 및 기존 연구 검토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관련 선행연구 검토	기존 자료 및 정책 환경 분석
	정책자료 분석	- 서울시, 중앙정부, 다·시도 정책 현황 분석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관련 서비스 현황 분석	
3단계 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당사자 260명 - 시설장 서면 조사: 지원시설 운영 애로사항 및 수요 19명	조사 기획 및 실시(설문조사, 면접조사)
	면접조사	- 설문지 구성을 위한 사전 면접 조사 -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면접 조사 33명	
4단계 정책방안 도출	전문가 자문	- 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개선방향 및 세부과제 도출
	정책방안 정리	- 정책 방안 및 추진 과제 개발	
5단계 결과보고	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II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현황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서울시 한부모가족 현황
3. 정책 현황 분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현황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1) 한부모가족 연구에서 지원시설 관련 연구

한부모가족 관련 연구에서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된 연구가 지배적이다.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 연령, 혼인지위의 다양성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부자가족 지원, 미혼모가족 지원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연구 영역에 있어서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주거(김승희·이한나, 2019), 일·생활균형(김영정, 2017; 장명선·이영호, 2020), 섹슈얼리티(이혜정·송다영, 2020)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중에서도 다수를 이루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조애저, 2004; 유정원, 20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능과 유형 모델 연구(이미정 외, 2011) 등이 있다. 생활시설 중심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시간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효과적인 인력 운영과 관련된 연구(김은지 외, 2020), 한부모가족 기능을 보호와 자립으로 차별화하는 운영 모델 연구(이미정 외, 2011) 등이 이루어졌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연계 및

4) 학술논문DB에서 최근 10년간 '한부모가족'을 키워드로 검색한 논문 제목 및 경향에 대한 정리는 불입³⁾을 참조할 것.

협력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조직 강화, 네트워크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는 연구(황정임 외, 2016)가 이루어졌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있어 포괄적인 정책 개선을 도출하고 있는 주요한 선행 연구로는 강은애(2020), 김은지 외(2019), 성정현 외(2017) 등을 들 수 있다. 강은애(2020)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경제적 자립에 국한하지 않고 과정으로서의 자립에 주목하면서 단계별 지원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권역별 확충을 제안하여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은지 외(2019)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인 소득보장 및 양육비 지급 등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생활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제안하고 있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의 관점에서 중요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다만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이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 입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계로 볼 수 있다. 성정현 외(2017)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가족 유형별, 성별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2)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연구

한편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연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박세경 외(2003)의 연구에서는 시설 유형별로 시설 환경, 조직 및 인력, 재정,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상담 및 문화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 및 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아동을 위한 환경이 미흡함이 지적되었다.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생활시설 입소율이 높아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시설 운영 측면에서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 최근 10년 사이 한부모가족의 수요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의 거주자 욕구 반영 정도 및 현



실적 욕구 적응 정도 측면에서 낮은 수준이며 ‘남녀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박세경 외, 2003:32-40).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자립 지원 강화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김승권(1999)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인화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적 성격으로 변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 정부의 지원 부족, 입소자에 대한 시설의 책임 문제,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으로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설운영 및 관리와 구호적 성격의 단순수용차원의 보호, 정부보조금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 속에서 시설의 개방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입소자 인권존중 등에 대한 욕구에 대한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다(조애저, 2004).

최근 들어서는 복지시설보다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거와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논의가 노인,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3년부터 “탈시설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비전으로 하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의 변환도모’라는 성과 목표를 위해 4개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를 제시하는 등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왔다.⁵⁾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분리된 공간에서 장기간의 단체 생활은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차단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발달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박숙경, 2021; 김남희, 2021). 이렇게 볼 때,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관련 연구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른 복지 정책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거주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시설 수도 적기 때문에 노인 및 장애인 시설에서 제기되는 시설화의 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 돌봄 및 교육 등 세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한부모가족의 특성상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5) <https://wis.seoul.go.kr/handicap/deinstitution/vision.do>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로서 생활시설의 유형도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용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별 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개선방안 마련보다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내용과 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원시설의 운영 개선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의 지원시설 이용 경험에 기초하여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II-1 】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연구명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정책제언	시사점
강은애 (2020), 『서울시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탈수급이나 탈빈곤 등 경제적 자립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립을 과정으로 보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발굴	- 문헌분석, 통계분석 - 당사자 및 종사자 면접조사(15명) - 한부모가구주(347명) 자립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 포괄적 안전망, 촘촘한 안전장치 마련, 차별 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 발굴 - 정서·심리적 건강지원, 사회적 관계강화 지원, 경제적 안정 지원 등	- 한부모가구주의 자립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확대 및 역할 강화 도출 - 전체적인 전달체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기능 및 역할 제시 부족
김은지 외(2019), 『한부모 가족지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장단기 정책대안 마련 - 한부모가족 수당 체계정비, 주거지원, 시설중보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문헌 연구 - 2차자료 분석 (인구주택총조사,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행복e음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한부모가족 소득보장 패키지 제안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재정 적절성 평가 등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방안 -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근로환경 개선방안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생활시설 근로환경 개선 유의미하지만, 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 부재는 한계
성정현 외(2017), 『한부모	-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서 가족 유	- 문헌연구 - 시설·지역 거주 한부모 당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법률 및 사업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



연구명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정책제언	시사점
지원정책 특정성별 영향분석 평가』, 여성 가족부.	형 및 성별 에 따른 효 과성 평가	사자 심층면 접(10명) 및 FGI(12명) - 당사자 설문 조사(217명)	- 청소년 미혼모 학습 권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안정 적인 삶 지원을 위한 사회적 차별 철폐 - 한부모가족 자녀양 육정책 - 한부모가족 자녀교 육과 여가문화 관련 정책 - 한부모가족의 건강 증진 - 별률지원 정책 등 개 선과제	분석평가를 시도하 여, 포괄적인 정책 개선방안 도출 유의 미 - 지원시설 및 서비스 에 대한 분석은 충분 하지 않음
본 연구	- 한부모가족 사회권 보장 측면에서 단 계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재 구조화	-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 당사자 설문조사 (600명): 시설 거주 경험에 따라 표집	- 한부모가족 단계별 지원에 있어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및 필요 과제 제안	

2. 서울시 한부모가족 현황

서울시 한부모+미혼자녀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0%를 차지하는 385,241가구이며 전체 한부모 가구 중에서 강서구(25,540가구), 노원구(23,840가구), 송파구(23,157가 구)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의 절대적인 수가 많다. 자치구 내 전체 가구 수 대비 한부모 가구 수의 비율로 보면 강북구(12.7%), 중랑구(12.1%), 도봉구/은평구(11.9%) 가 높게 나타나고 영등포구(8.1%), 관악구(8.2%), 서초구/강남구(8.8%)는 전체 가구 수에 비해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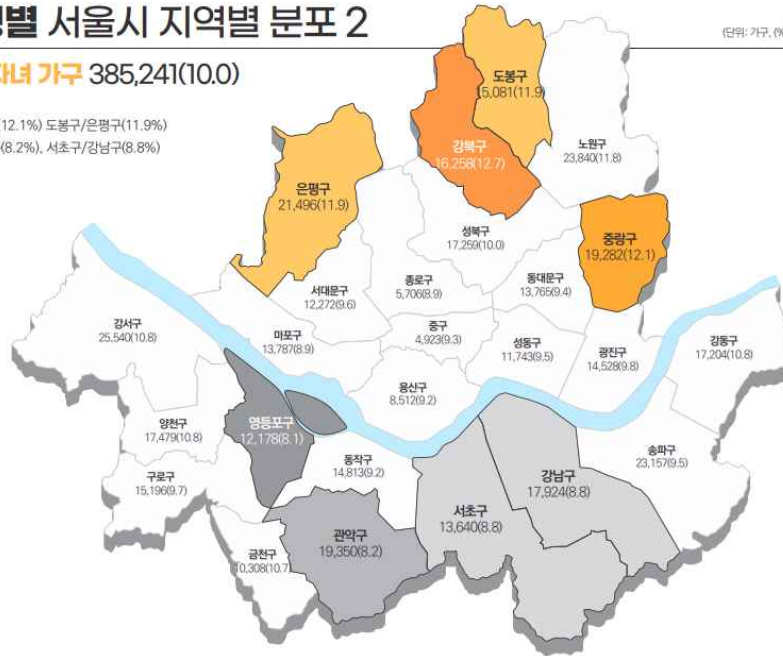
그림 II-1 서울시 한부모+미혼자녀 가구 분포(2018)

가구 유형별 서울시 지역별 분포 2

(단위: 가구, %)

한부모+미혼자녀 가구 385,241(10.0)

- 강북구(12.7%), 중랑구(12.1%) 도봉구/은평구(11.9%)
- 영등포구(8.1%), 관악구(8.2%), 서초구/강남구(8.8%)



출처: 이선형 외(2020)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모자 가구가 298,046가구로 전체 한부모가족의 77.4%, 부자 가구가 87,195가구로 22.6%에 해당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이 저소득 가구 지원과 중복되는 것은 한부모가족 가구주 성별 분포 때문이기도 하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 여성 가구주와 유배우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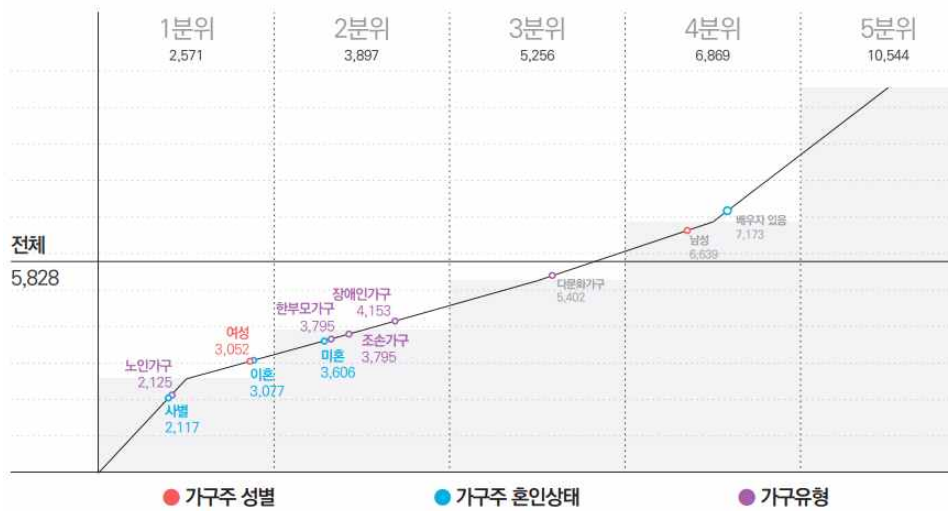
【 표 II-2 】 서울시 자치구 한부모가족 분포현황(2018)

(단위: 가구)

행정	한부모 가구		행정	한부모 가구			
	부자	모자		부자	모자		
종로구	5,706	1,251	4,455	마포구	13,787	3,046	10,741
중구	4,923	1,223	3,700	양천구	17,479	3,964	13,515
용산구	8,512	1,954	6,558	강서구	25,540	5,648	19,892
성동구	11,743	2,839	8,904	구로구	15,196	3,652	11,544
광진구	14,528	3,312	11,216	금천구	10,308	2,536	7,772
동대문구	13,765	3,300	10,465	영등포구	12,178	2,933	9,245
중랑구	19,282	4,693	14,589	동작구	14,813	3,253	11,560
성북구	17,259	3,835	13,424	관악구	19,350	4,476	14,874
강북구	16,258	3,648	12,610	서초구	13,640	3,000	10,640
도봉구	15,081	3,434	11,647	강남구	17,924	3,711	14,213
노원구	23,840	5,076	18,764	송파구	23,157	5,173	17,984
은평구	21,496	4,677	16,819	강동구	17,204	3,869	13,335
서대문구	12,272	2,692	9,580	서울시	385,241	87,195	298,046



【 그림 II-2 】 가구유형별 소득 현황(2019)



출처: 이선형 외(2020)

이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원대상은 전체 한부모가족의 일부분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한부모가족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그 중에서도 생활시설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가구수는 매우 적다. 이 같은 현황은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거주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II-3 】 연도별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2011~2020)

(단위 : 가구/가구원수)

연 도	총 계		1)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국가 보훈대상	
			소 계		(A) 재가보호		(B) 시설보호					
2020. 7.	31,704	73,389	6,886	22,581	6,800	22,495	86	86	24,818	50,808		
2019	32,407	75,457	8,135	26,778	8,053	26,696	82	82	24,272	48,679		
2018	34,824	81,703	9,590	32,754	9,481	32,645	109	109	25,234	48,949		
2017	36,178	85,225	10,177	36,238	10,058	36,119	119	119	26,001	48,987	-	-
2016	39,138	92,913	⑥11,555	40,478	11,450	40,373	105	105	27,583	52,435	-	-
2015	39,912	97,114	25,152	61,256	25,059	61,163	93	93	14,760	35,858	-	-
2014	40,497	106,352	27,522	71,691	27,450	71,619	72	72	12,975	34,661	-	-
2013	39,751	104,727	27,469	71,365	27,226	70,828	243	537	12,281	33,359	1	3
2012	37,845	97,913	26,227	67,295	26,106	67,058	121	237	11,617	30,615	1	3
2011	33,748	87,133	22,392	57,701	22,350	57,625	42	76	11,356	29,432	-	-

※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 1)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중 맞춤형급여를 동시에 보장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 2015년 12월 이전 : 한부모가족자격과 맞춤형급여자격 중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중 한 개 이상을 동시 보장받는 가구 제외
 - 2016년 1월 이후 : 한부모가족자격과 맞춤형급여자격 중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중 한 개 이상을 동시 보장받는 가구 제외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 한부모가족자격과 국민기초 자격 동시 보장 결정자 + 국민기초 자격 책정자 중 (A) 재가보호 : 수급자구분코드가 시설이 아닌 자 (B) 시설보호 : 수급자구분코드가 시설인 자, 한부모자격은 없으나 세대구분코드가 한부모가족 형태인 자

6) '15년 7월부터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가 실시되고, 주거급여(최저생계비 109%수준) 및 교육급여(최저생계비 127%수준)의 보장대상이 늘어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대상이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이 줄어들



3. 정책 현황 분석

1)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현황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및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조례」 등에 근거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서울시에 신고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은 26곳의 생활시설과 4곳의 이용시설이 있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및 위기임신지원 상담 서비스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생활시설에 지정되어 운영되는 서비스로 별도의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I-4】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현황(2020. 12. 말 기준)

기능별			개수	시설명	법인	설립시기
이용 시설	상담 및 서비스 제공		1	서울시한부모가족 지원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09
	상담	기본 생활	3	한국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한국 장로교사회복지재단	2008
				이주배경한부모 가족상담소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2020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KUMSN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20
생활 시설	모 부 자	기본 생활	모자 6	성심모자원	사회복지재단 성심원	1957
				해오름빌	사회복지재단 백산	1953
				영락모자원	사회복지재단 영락	1959
				동광모자원	사회복지재단 서울동광원	1976
				창신모자원	사회복지재단 창신모자원	1957
				평화모자원	사회복지재단 평화원	1953
		부자 1	선재누리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2014	
공동	부자 1	구세군한아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010		

기능별		개수	시설명	법인	설립시기	
미혼 모자	기본생활	6	구세군두리홈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1954	
			애란원	한국 장로교사회복지재단	1960	
			마음자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05	
			마포 애란원	한국 장로교사회복지재단	2015	
			도담하우스	(사)깨달음과 나눔	2015	
			바인센터	(사)여의도청년장학관	2018	
	공동	미혼 모자	10	애란영스빌	한국 장로교사회복지재단	2015
				구세군디딤돌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2008
				달빛등지	사회복지 진각복지재단	2007
				꿈나무	사회복지재단 평화복지재단	2013
				두리마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2014
				애란모자의집	한국 장로교사회복지재단	2006
				마포클로버	사회복지재단 홀트아동복지회	2008*
				열린집	사회복지재단 대한사회복지회	2015*
				아름뜰	사회복지재단 홀트아동복지회	2006*
생명누리의 집	사회복지재단 동방사회복지회	2009*				
	미혼 모	1	애란세움터	한국 장로교사회복지재단	2008	
일시지원	1	서울모자의집	사회복지재단 리우복지재단	2003		
계	30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2020), 여성가족부, 『202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시설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작성

*입양시설 운영기관

(1) 미혼모·부 초기 지원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정서, 출산·양육, 친자검사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역유관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II-5 | 미혼모·부 초기 지원

구분	내용
사업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사업수행기관	전국 17개소 *시·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 사회복지관 등 역량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실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서 사업 수행 중
지원 내용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출산 및 양육 지원: 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원 지원 가능) - 친자검사비 지원 -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출처: 복지포 홈페이지(<http://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155>)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시설들은 한부모의 성별, 혼인지위, 자녀 연령, 가정폭력 피해 유무에 따라 시설 유형이 구분된다. 우선 성별에 따라 모자시설과 부자시설로 구분된다. 부자시설은 모자시설과 달리 2010년 이후 설립되었으며 미혼부 지원시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미혼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체

132개 시설 중 65개 시설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자녀 연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자녀 연령 기준, 즉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이 공통으로 적용되며 미혼모 지원시설의 경우 임신부와 출산후 6개월 미만의 여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미혼모 기본생활지원시설과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공동생활지원시설이 있다. 이 밖에 일시지원시설의 경우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표 II-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정의

기능별		법적 정의
모자 가족 복지 시설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부자 가족 복지 시설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미혼 모자 가족 복지 시설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출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의)



이 밖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은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생활지원시설은 생계가 어려운 모·부자 가족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이며 공동생활지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 가족에서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본생활지원시설은 공동생활지원시설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가구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족’은 “입소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혼 또는 사별 등을 겪어 외부적인 충격을 경험한 모·부자가족(미혼모·부자 포함)”(여성가족부, 2021)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족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가 있다. 자립생활지원시설 유형의 경우, 자립욕구가 강한 모·부자 가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모자 자립생활지원시설만 2개소가 있으나 서울에는 이 유형의 시설은 없다.

표 II-7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020.12.31. 기준/개소)

기능별		전국	서울시	
모부자	기본	모자	42	6
		부자	2	1
	공동	모자	3	-
		부자	1	1
	자립	모자	2	-
		부자	-	-
소계		50	8	
미혼모자	기본		22	6
	공동	미혼모자	41	11
		미혼모	2	1
소계		65	18	
일시지원		9	1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8	3	
합계		132	30	

출처: 여성가족부(2021), 「2021 한부모가족사업안내」 참고하여 정리.

미혼모 기본생활지원형 시설의 경우, 출산 전·후 1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미혼 상태의 여성뿐만 아니라 이혼·사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소득기준 초과자, 가정폭력피해여성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즉 현재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은 여성의 혼인 지위와 상관없이 여성의 임신 및 출산, 신생아 돌봄 시기를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30개소(2020.12.31.기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입소기간 및 입소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8】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연장가능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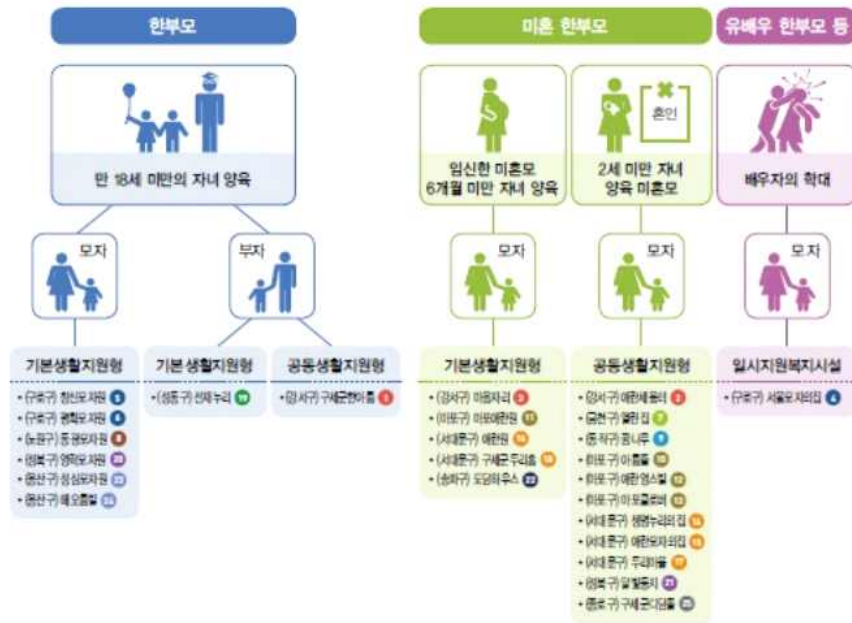
기능별		서울시	입소기간 (연장가능 기간)	입소 대상 ¹⁾	
모부자	기본 생활	모자	6	3년(2년)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부자	1	3년(2년)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공동	부자	1	2년(1년)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미혼모자	기본생활		6	출산 전·후 1년(6개월)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공동	미혼모자	11	2년(1년)	3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미혼모	1	2년(6개월)	비양육 미혼모
일시지원		1	6개월(6개월)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아동	

출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 7, 여성가족부(2021), 「2021 한부모가족사업안내」참고하여 정리.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함

그러나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은 한부모가족 당사자 및 지원시설 종사자들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워한다. 실제 면접 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1차 시설, 2세 미만 자녀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생활지원시설을 2차 시설, 소위 ‘모자원’으로 불리는 기본시설을 3차 시설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3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안내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07282>)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입소율은 2020년 평균 74%로 나타난다. 미혼모자공동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수는 10개소로 가장 많지만 입소율은 68.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절대적인 생활시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입소율 자체만으로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를 논의하기 보다는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전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표 II-9 】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율(2020)

기능별		시설수 (개소)	정원	현원	입소율	
모부자	기본생활	모자	6	128세대	95세대	74.2%
		부자	1	20세대	17세대	85.0%
	공동	부자	1	5세대	4세대	80.0%
미혼모자	기본생활		6	139명	104명	74.8%
	공동	미혼모자	10	86세대	59세대	68.6%
		미혼모	1	10명	7명	70.0%
일시지원		1	35명	26명	74.3%	
계		26	239세대/184명	175세대/137명	74%	

출처: 서울시내부자료(2020)

(3)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로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09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하다(2009~2010년) 2011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활성화,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이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II-10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한부모생활밀착형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 사각지대 한부모 발굴, 사회·정책적 자립정보 및 상담 제공, 활동가 역량강화 - 주요내용 • 사각지대 한부모가족에게 1:1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진행(최대 8회기) • 활동가 임파워먼트를 위한 온라인 보수교육, 찾아가는 워크숍 등 진행 등
한부모가족 상담지원사업	- 1:1 개인 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심리·정서적 문제와 갈등 완화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전문상담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기관 업무협약 •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1:1 전문상담 지원 (최대 16회기) • 온·오프라인 상시상담 지원을 통한 접근성 확대



사업명	사업 내용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및 자조모임 리더 주체적 역량강화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22개 지원(자립경험을 통한 발전적 논의 등) • 자조모임 리더 간담회 및 조직화 교육을 통한 한부모 권익 증대
모두하나 대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여 한부모가족, 유관기관이 함께 연대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확산 및 통합적 사회 환경 조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진행을 위한 공식홈페이지 개설(11년~19년 축제사진 및 영상 아카이빙) • 한부모가족과 일반시민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진행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의 시간빈곤 해결, 주거환경 개선 및 가족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가사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돌봄시간 확보 및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제공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리수납 서비스 및 교육 제공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방역 서비스 제공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04.do)

한부모가족 여성 당사자가 ‘생활코디네이터’로 활동하여 상담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한부모생활밀착형서비스’와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선형 외, 2020). 특히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족 지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만족도와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장명선, 2019).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22개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조모임 리더 간담회 및 조직화 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이며,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부모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하다.

표 II-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자치구	운영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자조모임명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	070-4238-1153	강동구 성안로 13길 56	글로벌 한부모회
강북구	변동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02-984-6777	강북구 오현로 208 변동주공 3단지 302동 1층	한.울
강서구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02-2668-8600	강서구 허준로 209	리스트ार्ट
구로구	구로과랑새나눔터 지역아동센터	02-838-5679	구로구 구로동로 38길 32 3층	푸른나무
	창신모자원	02-2612-7142	구로구 오류로 8나길 28	창신마더스
금천구	금천누리 종합사회복지관	070-4365-8106	금천구 가산로 129 (가산동 144-3)	금천구 꿈꾸는 Mom
노원구	노원구건다가센터	070-4613-0631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알.깨.기
도봉구	도봉구건다가센터	02-995-6800 (내선202)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열린mom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따로 또 같이
동대문구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02-920-4530	동대문구 약령시로5길 22 (제기동 220)	소담
동작구	동작종합사회복지관	02-6298-8132	동작구 등용로 47	꽃보다 아름다워
마포구	서울특별시 중부 여성발전센터	02-719-6304	마포구 토정로 35길 17	재능 JUMP
성북구	성북구건다가센터	070-4203-6396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힐링투어
은평구	녹번종합사회복지관	070-4441-1312	은평구 은평로 21길 14-26	힐링타임
	은평구건다가센터	070-7492-5224	은평구 은평로 21가길 15-17	당당하게 날다!
	은평종합사회복지관	070-4673-5114	은평구 은평터널로 48	톡톡타임
종로구	(사)지혜로운여성	02-722-2101	종로구 우정국로 45-13, 불교여성개발원	좋은 벗
	신내종합사회복지관	02-3421-3400	중랑구 봉화산로 153	당당맘
중랑구	유린원광종합 사회복지관	070-7011-1028	중랑구 신내로 56	봄봄가족

출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han/contents/han-supportVitalize.do>)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07279>)

(4)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3곳이 있으며, 이 중 서울시에 3곳이 신고되어 있다.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애란원에서 2008년 ‘나·너·우리한가족센터’라는 별도 상담소 사업을 시작하였던 시설이 2009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신고한 시설이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KUMSN)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설 상담소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신고되었다.

표 II-12 서울시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현황

시설명	운영 법인	설립연도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애란원	2009년
이주배경한부모가족상담소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2018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KUMSN)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19년

*법인으로 간주하는 시민단체 유권해석을 받아 상담소 등록(2018.3.)(*연구자가 전화로 확인)

2)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예산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통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등이 포함된다. 2020년 기준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는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항목의 운영지원이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며 기능보강, 입소자 상담치료,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서울시 예산과 국비로 매칭하여 지원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교통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예산 비중이 높다. 전체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전체 예산의 71.8%를 차지한다(2020년 기준).

【표 II-13】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예산 현황(2020)

(단위: 천원)

사업 내용	전체 예산	국비지원	서울시 예산
합계	64,811,480	25,106,847	39,704,63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8,913,428		8,913,42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043,082	1,021,541	1,021,54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31,240	115,620	115,6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639,251	189,675	449,576
시설배치 사회복지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9,941	9,941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1,352,058		1,352,058
한부모 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	106,400	106,40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6,534,836	23,267,418	23,267,418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4,163,740		4,163,74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817,504	396,252	421,252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20년 예산

2015년 이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서울시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 사업이 2019년 이후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편성되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서울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2개소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다. 미혼모부자 대상 지원 사업의 경우, 임신기 건강 및 생활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한 지원은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 운영이 전부인 것은 한계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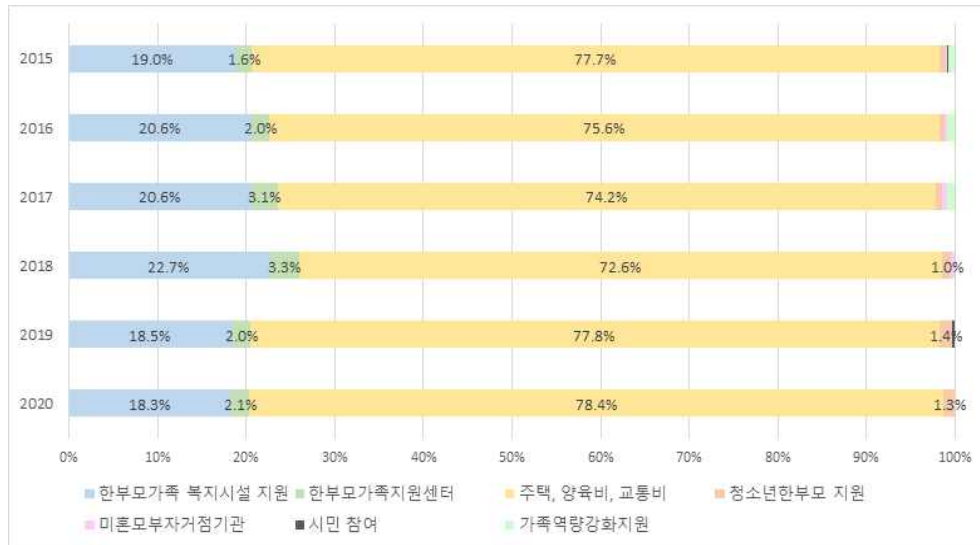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은 2018년 이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의 목적이 한부모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실제 서비스 대상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확충 및 서비스 내용 구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중 시민참여예산 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⁷⁾ 시

7)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2.5.22.)를 제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2017년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개편하고 운영규모도 700억원으로 확대하였음. 시정협치형, 구·동단위계획형 사업 등으로 진행됨(<https://yesan.>

민참여 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힐링 여행 프로젝트, 자활 프로젝트, 상담, 학업 지원, 반찬 지원 등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시민참여 예산의 규모는 작으나 서울시정의 주요 방향인 협치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과 및 평가에 기초하여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서 시민 및 당사자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림 II-4】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2015~2020)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서(각년도).

seoul.go.kr/intro/intro0101.do

【 표 II-14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현황(2012~2020년)

(단위: 천 원, %)

구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주택, 양육비, 교통비	청소년 한부모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시민참여	가족역량 강화지원	합계
2015년	8,184,323(19.0)	696,981(1.6)	33,514,048(77.7)	289,330(0.7)	100,000(0.2)	55,000(0.1)	318,250(0.7)	43,157,932(100.0)
2016년	8,595,605(20.6)	828,311(2.0)	31,497,254(75.6)	280,000(0.7)	100,000(0.2)	-	372,500(0.9)	41,673,670(100.0)
2017년	8,090,725(20.6)	844,749(3.1)	29,178,011(74.2)	290,000(0.7)	200,000(0.5)	25,000(0.1)	338,140(0.9)	38,966,625(100.0)
2018년	8,215,123(22.7)	1,204,732(3.3)	26,298,000(72.6)	368,000(1.0)	150,000(0.4)	-	-	36,235,855(100.0)
2019년	10,532,988(18.5)	1,120,963(2.0)	44,371,134(77.8)	788,482(1.4)	-	221,762(0.4)	-	57,035,329(100.0)
2020년	11,836,942(18.3)	1,352,058(2.1)	50,804,976(78.4)	817,504(1.3)	-	-	-	64,811,480(100.0)

주 1) 총액 = 서울시 자체 예산 + 중앙정부 예산

주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설배치 사회복지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2014년)

주택, 양육비, 교통비: 한부모 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가족역량 강화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 방문서비스 지원, 가족보듬,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서(각 연도).

3)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만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등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되는 사회서비스이며 교육 급여 등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급되는 복지서비스는 학교를 통해 전달된다. 한부모가족 당사자 입장에서 지원시설 서비스 및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영역별로 검토하였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주거, 자립 지원, 돌봄, 심리·정서 지원, 교육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혼모자 기본생활 지원형의 경우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이용 할 수 있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의 경우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른 비밀보장 및 특별지원 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

표 II-15 시설 유형별 서비스 내용

시설	지원내용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주거제공,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숙식 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자립지원(직업교육,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숙식무료 제공,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일시지원복지시설	숙식 무료 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의료혜택, 법률상담, 심리상담,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자녀의 방과 후

시설	지원내용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출처: 여성가족부(2021), 『202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양육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 및 한부모 연령기준도 완화되고 금액도 증가해왔다. 무엇보다 2021년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양육비를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급여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탈빈곤 및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

표 II-16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2021)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서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21. 5월부터 만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21. 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21. 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연령 기준이 연나이('18년도)에서 만나이('19년~)로 변경됨을 유의

출처: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OpfView.do>

한부모가족 정책에서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구”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생계급여 및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이 52% 이하 소득 기준이 60% 이하 소득기준으로 완화되며 양육비 금액도 높임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을 강화하였다.

【표 II-1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2021)

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	월 3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수시지급 (신청시)	연 154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분기별 지급	실비**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별 지급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출처: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OpfView.do>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서비스

생활시설 거주 이외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주거 관련 정책은 주거급여, 주거 임대, 주거자금 대출 등의 서비스가 있다.

【 표 II-18 】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급여

구분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지원내용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수선비용을 경·중·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45%이하(80%지원)				

출처: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주택 공공분양 시 한부모가족이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자녀 연령 제한, 가구원 수에 따른 가점제 적용 어려움 등으로 실제 적용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 표 II-19 】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 임대

주택유형		순위 및 내용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1순위)	
	신혼희망타운주택	가점제로 우선공급	
공공임대	영구임대	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행복주택	일반공급 대상(일반형), 1순위(산단근로자)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특별공급(기관추천)	
	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42.do)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이외에 2014년부터 시작된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서비스는 2021년 현재 서울시 16가구 지원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

럽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과 생활시설의 주거서비스 이외에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형태를 향후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표 II-20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소 후 자립생활 및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소 가능 *미혼부의 경우 임대주택 여건·지역 특성·주택구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 여부 심의·결정
입주 기간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입주 방식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입주 순위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출처: 여성가족부(2021), 『202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인‘나는 가장이다’는 임차보증금 용도로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무이자로 지원해준다.

【 표 II-21 】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나는 가장이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장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취학 시 만 22세,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 가산한 연령)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지역</th> <th>수도권</th> <th>광역시</th> <th>그 밖의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금액</td> <td>9,000만원</td> <td>7,000만원</td> <td>6,000만원</td> </tr> </tbody> </table>	지역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금액	9,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지역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금액	9,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대출용도	신규·재계약에 따른 상향 조정된 임차보증금								
대출금액	1세대 당 최대 500만원(신용회복 세대 시 300만원)								
상환방법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하여 자동이체 상환(무이자)								

출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oulhanbumo.or.kr/han/contents/han-reinforceCapa.do>)

□ 자립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해 현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위해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자립지원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청소년 특별지원과 교육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표 II-22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구분	내용
서비스대상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연령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월 35만원/인 -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인 - 학용품비: 연 5.41만원/인 - 자립지원촉진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 월 10만원

출처: 복지포 홈페이지(<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5>)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내일 키움 통장은 총 3종류로 지원요건이 있으며 모두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I 은 생계, 의료 탈수급을 목표로 하며 매월 5,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월평균 35만원, 최대 64만원을 지원해준다. 희망키움통장 II는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사례관리를 조건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준다. 내일키움통장은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업, 창업 등을 목표로 매월 5, 10, 20만원을 저축할 시 장려금 최대 10만원, 수익금 최대 15만원을 지원해준다.

【 표 II-23 】 한부모가족 희망·내일키움 통장

구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지원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
지원 내용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5/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 (월평균 35만원, 최대 64만원)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	매월 5/10/2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키움 장려금 최대 10만원, 내일키움 수익금을 최대 15만원 지원
지원 요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종시장 취·창업 등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33.do)



□ 취업·창업

한부모가족 취업 및 창업 교육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다.

【 표 II-24 】 한부모가족 취업 및 창업교육지원

구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등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지원 내용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유형별 지원 - (공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I 유형)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6개월) - (II 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34.do)

□ 상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상담 대표전화도 운영 중이다.

【 표 II-25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사업수행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지원 범위	심리검사비, 전문상담료 및 치료비,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비, 가족치유캠프 등 운영비, 교통실비 등
단계	1단계: 시설 입소자들 심리검사 및 초기 면접 실시 2·3단계: 전문심리상담 혹은 약물치료 실시

출처: 여성가족부(2021), 『202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 경우, 2020년부터 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전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실시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은 전문적인 민간 상담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담은 정보제공, 미혼모·부 초기지원, 재가 한부모 대상, 시설 한부모 대상 상담으로 나누어진다.

【 표 II-26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상담 서비스

정보 제공	미혼모·부 초기지원	재가	시설
상담: 연인원 3,000여명/매뉴얼 배포 만족도조사 실시	부정적인 자아개념 감소, 긍정적인 미래설계 개인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찾아가는 상담	재가양육 한부모·자녀 심리상담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시설입소 한부모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사업 효율성

출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oulhanbumo.or.kr/han/contents/han-reinforceCapa.do>),

□ 돌봄

혼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족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시설에 입소했거나 1년 이내 퇴소자인 경우,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입주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과 이용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해준다.

표 II-2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및 1년 이내 퇴소자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사업 입주자
지원 요건	-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공백기준(한부모의 취업·학업(준비), 한부모가족의 질병 등)에 대해 확인을 받은 경우 - 한부모가족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사업수행기관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생후 3개월 미만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

출처: 여성가족부(2021), 『202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동시에 지원 대상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1회 당 4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고 중위소득 120%, 80% 이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 표 II-28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아래 조건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가족 -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 중인 경우 - 36개월 미만 자녀 양육하는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질병으로 돌봄시간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질병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설거지) *정리수납 서비스: 꼭 필요로 하는 가구 선별하여 가구당 연 1회 제공		
서비스시간	1회당 4시간(30분 휴게시간 포함)		
이용요금	이용요금	A형(중위소득 80% 이하)	B형(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시 지원금	47,000원	45,000원
	본인 부담금	8,000원	10,000원
	총액	55,000원	55,000원

출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oulhanbumo.or.kr/han/contents/han-reinforceCapa.do>)

정보 제공: 법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통해 이혼 및 양육비 등 한부모가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표 II-29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구분	내용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사업수행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
지원 사건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사건 형사사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 사건

출처: 여성가족부(2021), 『202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III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 설문조사

1. 조사 목적 및 개요
2. 당사자 설문 조사 주요 결과
3. 시설장 서면 조사 주요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설문조사

1. 조사 목적 및 개요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근거한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생활시설은 미혼모자 공동생활 및 기본생활시설, 모·부자 기본생활, 일시지원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용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당사자 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협조를 받아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지원시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지금까지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한부모는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응답하고 설문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26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없거나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2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수는 크지 않지만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응답자로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에서 현재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5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0.6%로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시설거주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설문 조사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 설문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조사 기간	2021년 6월~8월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 128명 * 260명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지원시설 이용경험이 없거나, 결측치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총 128명 유효표본으로 분석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종류,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지원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 및 추천하고 싶은 사업: 주거, 교육, 상담, 돌봄, 문화, 후원 등 -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 및 평가 - 지원시설 이용 시 인권 침해 경험 - 복지시설 종류 및 유형에 대한 이해도 - 한부모가 되는 과정 및 자녀 연령 기준 어려운 시기 및 이유, 대응 방법 - 비양육 부모 및 원가족 연락 빈도, 양육비 지급 여부, 긴급 돌봄 사유 발생 시 도움 -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 및 종류 -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근로 여부 및 형제, 자녀 수 및 학령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시설장 및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서면조사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시설장 서면 조사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 시설장(사무국장) 서면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
조사 기간	2021년 6월~8월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서면 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시설장(또는 사무국장) 19명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특성: 시설 유형, 소속, 직위, 성별, 학력 등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현황: 운영 주체, 설립 연월일, 정원 및 현원, 이용자 수, 면적 등 - 종사자 인력 현황 -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 및 활용 여부, 당직 및 휴일, 초과근로 현황 -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제도 여부 - 지원시설 운영 인력 어려움 - 시설 환경 측면의 어려움 - 예산 구조(보조금, 법인부담금, 후원금 등) -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어려움, 서비스 개선방향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 - 한부모가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등



2. 당사자 설문 조사 주요 결과

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여성이 120명(93.8%), 남성이 8명(6.3%)으로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9.18세였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0대로 31.3%였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9.2%, 4년제 대학 졸업 23.4%, 2-3년제 대학 졸업 13.3% 순이었다. 자녀는 1명이 68.0%, 2명이 20.3%, 3명 이상이 11.7%를 차지하였고 자녀 학령은 미취학이 42.2%, 초등학생 32.0%, 중학생 14.1%, 고등학생 7.8%, 성인 3.9%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7%가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근무 형태는 시간제 임금 근로가 4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일제 임금 근로 35.6%, 자활 및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3.7%로 나타났다.

【 표 III-3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전체		128(100)
성별	여성	120(93.8)
	남성	8(6.3)
연령	20대 이하	24(18.8)
	30대	40(31.3)
	40대	46(35.9)
	50대 이상	18(14.1)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1(8.6)
	고등학교 졸업	63(49.2)
	2-3년제 대학 졸업	17(13.3)
	4년제 대학 졸업	30(23.4)
	대학원 재학 이상	7(5.5)
자녀 수	1명	87(68.0)
	2명	26(20.3)
	3명 이상	15(11.7)
자녀 학력 (가장 어린 자녀 기준)	미취학	54(42.2)
	초등학생	41(32.0)
	중학생·고등학생	28(21.9)
	성인(대학생 이상)	5(3.9)
근로 여부	예	73(57.0)
	아니오	55(43.0)
근무 형태 (n=73)	전일제 임금 근로	26(35.6)
	시간제 임금 근로	35(47.9)
	자영업자	2(2.7)
	자활 및 공공근로	10(13.7)

응답자들이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로는 이혼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비혼 출산이 37.5%, 이혼 소송 중 별거 6.3%, 사별과 기타가 3.9%, 가정 폭력으로 인한 별거가 3.1%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II-4 】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

사유	빈도(%)
이혼	58(45.3)
이혼 소송 중 별거	8(6.3)
가정 폭력으로 인한 별거	4(3.1)
사별	5(3.9)
비혼 출산	48(37.5)
기타	5(3.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가 83.6%,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14.8%, 모르는 경우 1.6%로 나타났다.

【 표 III-5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여부

여부	빈도(%)
예	107(83.6)
아니오	19(14.8)
모른다	2(1.6)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받고 있는 지원을 중복으로 물어본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주거급여가 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 양육비가 67명, 의료급여 55명, 교육급여 53명, 생계급여 50명 순이었다.

【 표 III-6 】 현재 받고 있는 지원(중복 응답)

(n=107)

항목	명
생계 급여	50
의료 급여	55
주거 급여	69
교육 급여	53
자활근로 장려금	5



항목	명
아동 양육비(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67
아동교육 지원비	16
생계비(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22
청소년 한부모 지원(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 포함)	6
기타	9

본 연구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기존 『한부모가족실태조사』(김은지 외, 2018)와 비교해 보면, 30대 이하 한부모 비율이 50.1%, 비혼 출산 한부모 비율이 35.7%로 매우 높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응답자는 이혼이 77.6%, 사별이 15.4%, 기타가 7.0%로 나타났다.⁸⁾ 또한 30대 이하 연령대는 29.0%, 50대 이상이 16.5%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8)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경우는 각각 2.3%, 0.9%로 매우 낮아 전국에서 80명 정도가 포함되었다.

2)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여부 및 과정

(1) 공동생활의 불편함, 지원시설 정보 몰라 이용하지 않음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30.2%(62명), 이용한 적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32.2%(66명),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37.6%(77명)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는 지원시설 이용 경험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조사 시점에서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질문한 후 조사를 종료하였다.

시설 이용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지원시설이 멀리

8) 비혼 출산 가구는 별도 분석 범주는 아니고, ‘기타’에 포함되었으며, 전체 2,500가구 중 100가구, 즉 4%임.

위치해 있어서'라는 응답이 22.1%, '공동생활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13.0%를 차지하였다. 반면,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공동생활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사유 19.7%, 지원시설이 멀리 위치해 있어서가 16.7%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에는 시설 입소 기간이 끝나서, 자립을 위해서 등의 사유가 있었다.

【 표 III-7 】 지원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하지 않는 이유

여부		빈도(%)
현재 이용함		62(30.2)
이용한 적 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음		66(32.2)
(n=66)	지원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함	9(13.6)
	이용 자격 기준 충족하지 못함	6(9.1)
	지원시설이 멀리 위치함	11(16.7)
	공동생활이 불편함	17(25.8)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1(1.5)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음	9(13.6)
	기타	13(19.7)
	전혀 없음	77(37.6)
(n=77)	지원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함	27(35.1)
	이용 자격 기준 충족하지 못함	10(13.0)
	지원시설이 멀리 위치함	17(22.1)
	공동생활이 불편함	10(13.0)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6(7.8)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음	2(2.6)
	기타	5(6.5)



【 표 III-8 】 과거에 이용한 적 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

(n=66)

사유	빈도(%)
지원시설이 있는지 알지 못함	9(13.6)
이용 자격 기준 충족하지 못함	6(9.1)
지원시설이 멀리 위치함	11(16.7)
공동생활이 불편함	17(25.8)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1(1.5)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음	9(13.6)
기타	13(19.7)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이용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유형은 이용시설이 45.3%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5.2%,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모두 이용해본 경우가 19.5%였다. 생활시설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거주 기간은 평균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 표 III-9 】 현재까지 이용해본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유형

(n=128)

이용시설	빈도(%)
생활시설	45(35.2)
이용시설	58(45.3)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25(19.5)

응답자들이 이용한 지원시설을 구체적으로 중복 응답하게 한 결과, 이용시설이 63.2%, 생활시설이 36.8%로 이용시설이 많았다. 생활시설에서는 미혼모자공동생활 시설이 16.6%, 이용시설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8.2%로 가장 높았다. 지원시설의 숫자를 고려한다면, 서울시에 한 곳 밖에 없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이용 비율이 높은 편이다.

【 표 III-10 】 현재까지 이용해본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n=253)

시설		빈도(%)
생활시설		93(36.8)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42(16.6)
	미혼모·부자 기본생활시설	17(6.7)
	모·부자 기본생활시설	16(6.3)
	일시지원복지시설(쉼터 등)	18(7.1)
이용시설		160(63.2)
	한부모가족지원센터	43(17.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6(2.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6(18.2)
	지역사회복지관	41(16.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15(5.9)
	기타	9(3.6)



(2) 지원시설 정보는 홈페이지, 친구 지인 소개로 알게 됨

응답자들에게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를 물어본 결과, 민간단체 홈페이지 21.9%, 친구 및 지인 소개 18.0%,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17.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II-11 】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n=128)

시설	빈도(%)
동주민센터 및 구청 소개	16(12.5)
유관 기관 연계(상담소, 생활시설 등)	9(7.0)
친구 및 지인소개	24(18.0)
민간단체 소개(한부모 및 미혼모 단체 등)	12(9.4)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인터넷, SNS, 카페 등)	22(17.2)
민간단체 홈페이지(인터넷, SNS, 카페 등)	28(21.9)
기타	17(13.3)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한부모가족 시설 및 서비스 관련 정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었다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특히 매번 변경되는 서비스 지원 기준 및 신규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은 카페 또는 자조 모임의 회원으로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을 나누거나 물건 나눔, 민간의 물품 후원에 관한 정보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만족도 및 평가

(1) 주거 관련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 1순위는 주거가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는 물품 등의 후원이라는 응답이 26.0%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여도 역시 주거가 65.7%로 가장 높았고 후원 39.3%, 상담 29.8%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II-12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시 만족도가 높은 사업 1·2순위

(n=128)

사업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주거	66(51.6)	18(14.2)	84(65.7)
교육	8(6.3)	22(17.3)	30(23.6)
상담	19(14.8)	19(15.0)	38(29.8)
돌봄	9(7.0)	21(16.5)	30(23.6)
문화	9(7.0)	14(11.0)	23(18.1)
후원	17(13.3)	33(26.0)	50(39.3)

주거 서비스 이외에 생활 물품 지원 등과 같은 후원에 대한 만족도가 2순위로 나타난 것은 구체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면접조사 참여자 중에는 물품 후원이 많을 때에는 휴지, 생리대, 세제,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기 등 품목이 다양하여 별도의 생필품 비용을 쓰지 않고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사례 B-10〉). 다른 한편 생활 물품 후원뿐만 아니라 민간 후원의 경우에는 법적인 지원 기준과 상관없이 현금 및 돌봄, 상담 등 추가적인 지원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사례 A-9〉).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받았던 서비스 중에서 다른 한부모에게 추천하고 싶은 사업을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가사지원서비스, 주거대출자금 지원 등의 사업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Ⅲ-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추천 사업



주거 관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생활시설의 주거 공간 제공, 주거대출자금 지원 및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의 서비스가 한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돌봄, 주거, 자립 영역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높게 나타남

한편 지원시설에서 받은 서비스가 삶의 각 영역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자녀 돌봄이 3.47점, 안정적인 주거 3.45점, 경제적 자립이 3.4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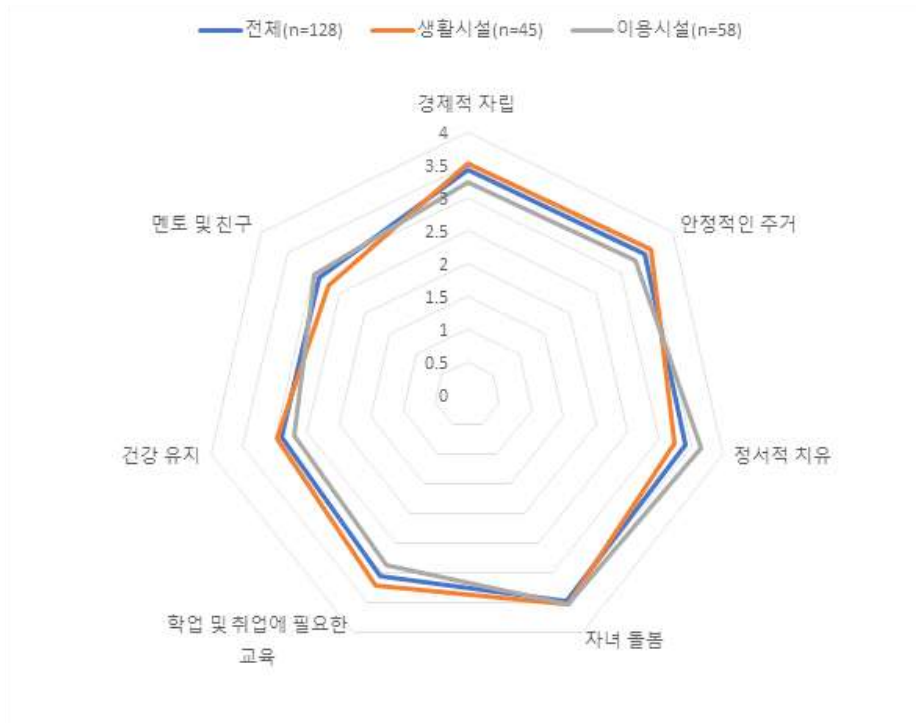
한부모의 건강 유지 및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영역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 현재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각지대로 보인다. 실제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8)에서도 의료서비스 이용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는 응답이 23.2%로 만19세 이상 전체 국민의 연간 미충족률인 8.8%에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인 이유나 돌봄을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사례 A-8〉, 〈사례 A-7〉, 〈사례 C-1〉, 〈사례 C-8〉).

【 표 III-13 】 서비스가 삶에 도움이 된 정도

항목	전체(n=128)	생활시설(n=45)	이용시설(n=58)	t
	M(SD)	M(SD)	M(SD)	
경제적 자립	3.43(1.18)	3.53(1.12)	3.24(1.26)	1.22
안정적인 주거	3.45(1.18)	3.56(1.20)	3.28(1.24)	1.15
정서적 치유	3.41(1.14)	3.24(1.17)	3.64(1.04)	-1.80
자녀 돌봄	3.47(1.09)	3.53(1.06)	3.53(1.06)	-.01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3.06(1.13)	3.22(1.04)	2.86(1.18)	1.62
건강 유지	2.90(1.23)	2.98(1.77)	2.71(1.27)	1.11
멘토 및 친구	2.89(1.20)	2.69(1.20)	2.97(1.21)	-1.15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만을 이용한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생활시설을 이용한 한부모들은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 교육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이용시설만 이용한 한부모들은 정서적 치유와 멘토 및 친구 관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활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비추어 볼 때,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부모들끼리의 멘토 및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우선 다양한 이유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어 관계에서 “날이 서 있기”(〈사례 A-4〉) 때문이기도 하고 일과 돌봄으로 정신없이 바빠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사례 B-1〉)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 차원에서 “엄마들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사례 A-9〉)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활시설에서 만났던 “언니”와 사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사례 B-5〉) 그 같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서비스가 제도화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정서적 치유와 관련해서는 한부모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심리적 자립을 이루었다는 응답자부터(〈사례 A-3〉), “지옥을 경험했다”(〈사례 A-4〉)는 응답자에 이르기까지 수위가 다양하였다.

■ 그림 III-2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가 삶에 도움이 된 정도(시설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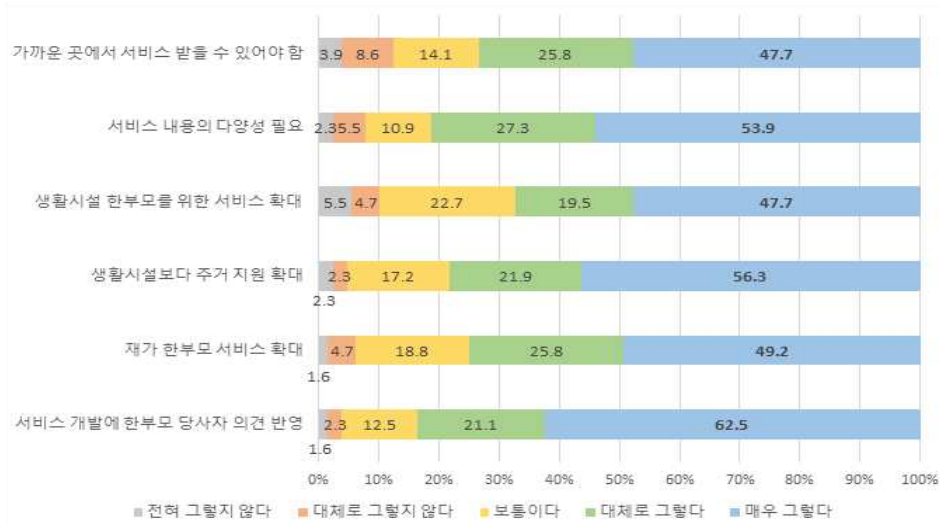


(3) 한부모가족 당사자 의견 반영에 대한 수요 높게 나타남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개선 방향과 관련한 의견 조사에서는 ‘서비스 개발에 한부모가족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이 3.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점수가 아닌 빈도로 확인해보면, ‘서비스 개발에 한부모가족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2.5%, ‘생활시설보다 주거 지원 확대’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6.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47.7%로 ‘매우 그렇다’는 동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방향에 있어 당사자 의견 반영 및 주거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III-3】 지원시설 서비스 중 다음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n=128)



시설 이용에 따라 차이를 확인해보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는 항목에 생활시설만 이용한 한부모는 4.27점으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이용시설만을 이용한 한부모는 3.7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이용시설만 이용한 한부모는 ‘생활시설보다 주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생활시설만 이용한 한부모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III-14】 지원시설 서비스 중 다음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항목	전체(n=128)	생활시설(n=45)	이용시설(n=58)	t
	M(SD)	M(SD)	M(SD)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어야 함	4.05(1.15)	4.04(1.07)	3.98(1.25)	.27
서비스 내용의 다양성 필요	4.25(1.01)	4.16(.98)	4.24(1.06)	-.42
생활시설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확대	3.99(1.18)	4.27(.99)	3.76(1.20)	2.30*
생활시설보다 주거 지원 확대	4.27(.99)	4.24(1.05)	4.29(.92)	-.25
재가 한부모 서비스 확대	4.16(.99)	4.13(1.01)	4.14(.96)	-.02
서비스 개발에 한부모 당사자 의견 반영	4.41(.91)	4.27(.99)	4.48(.82)	-1.21

주: * p<0.05

* 5점척도 이용.



(4) 생활시설에서 사생활 침해 경험 높게 나타남

시설 이용 시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경험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 당사자의 의견 수렴 부재’가 2.59점으로 가장 높고 원하지 않는 종교 활동 강요 항목이 1.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응답 중 ‘사생활 침해’가 2.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시설 응답자들의 ‘물품과 서비스의 불공정한 지원’ 항목이 2.62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 당사자의 의견 수렴 부재’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지원시설 서비스 개발에 한부모 당사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동의 정도가 높은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시설장 조사 결과에서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 과정’을 위한 제도가 모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이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룬 경우도 있었다(〈사례 A-9〉). 그러나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지원시설에서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었다.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어려워, 외부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의 불이익(〈사례 B-5〉, 〈사례 B-7〉, 〈사례 A-9〉 등)을 당했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표 III-15】 시설 유형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인권 침해 등 경험

경험	전체 (n=128)	생활시설 (n=45)	이용시설 (n=58)	t
	M(SD)	M(SD)	M(SD)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 및 행동(폭언 및 폭행 등)	2.25(1.40)	2.47(1.46)	2.02(1.29)	1.66
원하지 않는 종교활동 강요	1.99(1.38)	2.20(1.55)	1.74(1.93)	1.65
사생활 침해	2.51(1.50)	2.73(1.48)	2.07(1.31)	2.41*
이용당사자 의견 수렴 부재	2.59(1.39)	2.58(1.44)	2.53(1.35)	0.16
물품과 서비스의 불공정한 지원	2.53(1.50)	2.38(1.45)	2.62(1.46)	-0.84

주: * p<0.05

* 5점척도 이용.

【 표 III-16 】 시설 유형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인권 침해 등 경험

(단위 : 명, %)

경험	전혀 경험한 적 없다(①), 자주 경험했다(⑤)					
	①	<----->				⑤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 및 행동 (폭언 및 폭행 등)	생활	16(35.6)	10(22.2)	8(17.8)	4(8.9)	7(15.6)
	이용	30(51.7)	9(15.5)	12(20.7)	2(3.4)	5(8.6)
원하지 않는 종교활동 강요	생활	24(53.3)	6(13.3)	4(8.9)	4(8.9)	7(15.6)
	이용	39(67.2)	3(5.2)	11(19.0)	2(3.4)	3(5.2)
사생활 침해	생활	14(31.1)	6(13.3)	11(24.4)	6(13.3)	8(17.8)
	이용	30(51.7)	7(12.1)	12(20.7)	5(8.6)	4(6.9)
이용당사자 의견 수렴 부재	생활	13(28.9)	13(28.9)	6(13.3)	6(13.3)	7(15.6)
	이용	18(31.0)	10(17.2)	19(32.8)	3(5.2)	8(13.8)
물품과 서비스의 불공정한 지원	생활	17(37.8)	12(26.7)	4(8.9)	6(13.3)	6(13.3)
	이용	19(32.8)	10(17.2)	12(20.7)	8(13.8)	9(15.5)

* 생활시설 (n=45), 이용시설 (n=58), 5점척도 이용.

4)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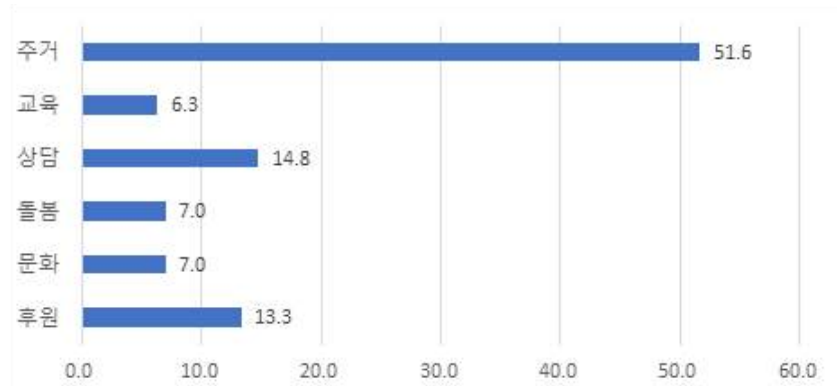
(1)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의 기능과 역할 중요하게 생각함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자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독립적 주거 공간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현금 및 물품 후원 서비스 연계가 18.0%,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가 17.2%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지원시설 서비스 만족도에서 주거와 후원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다만 만족도의 경우 주거를 선택한 비율이 51.6% 절반을 넘었다면 중요도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 다음으로 자립에 필요한 역량, 돌봄, 후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는 것이다.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4.8%로 높게 나온 반면, 중요도는 7%로 낮게 나타나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은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순위가 낮은 서비스라는 점을 보여준다.

Ⅲ-4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중 중요한 서비스 (단위: %)



Ⅲ-5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만족도(1순위) (단위: %)



(2) 생활시설의 인권 보장 동의 낮고, 장기 거주 공간 역할 동의 높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한부모들의 실질적인 자립, 인권 보장, 거주 공간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10.9%로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이며,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32.0%가 응답한 ‘생활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이다. 점수로 환산해보았을 때도 ‘생활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항목이 3.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시설



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3.12점으로 가장 낮았다. 추가분석 결과, 이용해본 시설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17 】 지원시설 기능과 역할 중 다음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n=128)

항목	전체 (n=128)	생활시설 (n=45)	이용시설 (n=58)	t
	M(SD)	M(SD)	M(SD)	
생활시설은 실질적 자립에 도움	3.40(1.15)	3.45(1.01)	3.29(1.18)	.38
이용시설은 실질적 자립에 도움	3.48(1.06)	3.38(1.03)	3.55(1.01)	.39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 보장	3.12(1.18)	3.02(1.08)	3.17(1.13)	.50
이용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 보장	3.33(1.09)	3.22(1.06)	3.38(1.01)	.45
생활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 역할	3.49(1.30)	3.58(1.31)	3.38(1.27)	.44
생활시설은 단기 거주 공간 역할	3.24(1.15)	3.22(1.08)	3.22(1.14)	.99

* 5점척도 이용.

【 그림 III-6 】 지원시설 서비스 중 다음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n=128)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류, 당사자들도 정확하게 모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복지시설의 종류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2.47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해본 시설 별로 차이는 없었다. 시설별 비율을 보았을 때, 생활시설 이용 당사자들은 ‘대체로 모른다’가 40.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용시설 이용 당사자들은 ‘대체로 알고 있다’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III-1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차이 인지 정도

항목	전체 (n=128)	생활시설 (n=45)	이용시설 (n=58)	t
	명(%)	명(%)	명(%)	
전체(MSD)	2.47(.83)	2.42(0.84)	2.29(.79)	.80
전혀 모른다	18(14.1)	6(13.3)	11(19.0)	
대체로 모른다	42(32.8)	18(40.0)	20(34.5)	
대체로 알고 있다	58(45.3)	17(37.8)	26(44.8)	
매우 잘 알고 있다	10(7.8)	4(8.9)	1(1.7)	

* 4점척도 이용.



【 그림 III-7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차이 인지 정도



(4) 혼인 지위보다는 자녀 연령 구분 지원 필요 동의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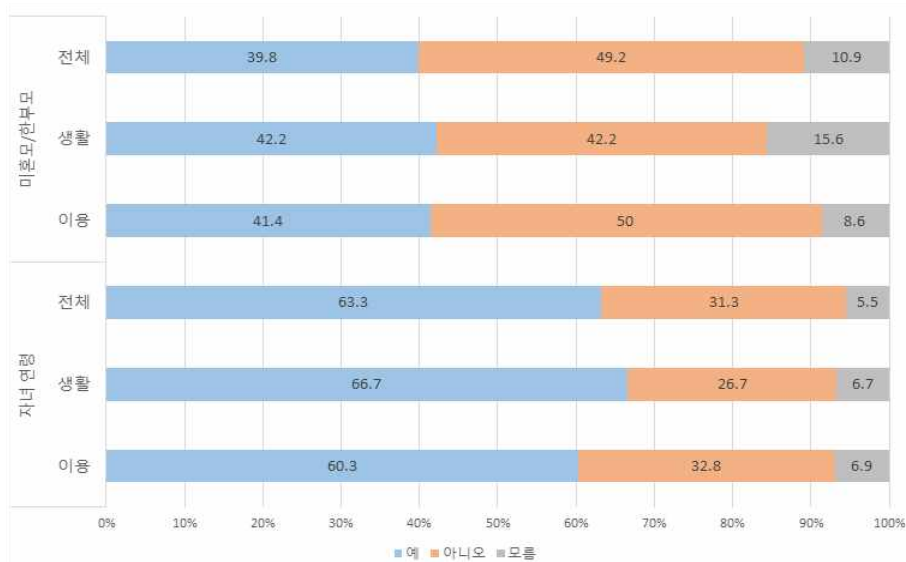
응답자들에게 생활시설을 미혼모와 한부모, 자녀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미혼모와 한부모가 거주하는 생활시설이 구분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이 응답자(49.2%)가 아니라고 응답했고 자녀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63.3%)고 하였다. 경험한 시설 별로 차이는 없었으며 생활시설을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거주하는 시설이 분리되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66.7%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19 생활시설 구분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생활시설 기능 구분 기준 필요							
		미혼모/한부모				자녀 연령			
		예	아니오	모름	χ^2	예	아니오	모름	χ^2
전체(n=128)		51(39.8)	63(49.2)	14(10.9)		81(63.3)	40(31.3)	7(5.5)	
시설	생활(n=45)	19(42.2)	19(42.2)	7(15.6)	2.89	30(66.7)	12(26.7)	3(6.7)	2.39
	이용(n=58)	24(41.4)	29(50.0)	5(8.6)		35(60.3)	19(32.8)	4(6.9)	

그림 III-8 생활시설 구분 필요성



5) 한부모가족 단계별 정책 수요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애주기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부모가족 당사자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생애사적 사건들이 단계별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부모 입장에서 한부모가 되는 과정 이후 어려웠던 시기와 그에 대한 대처, 자녀 연령별 기준으로 어려웠던 시기와 그에 대한 대처를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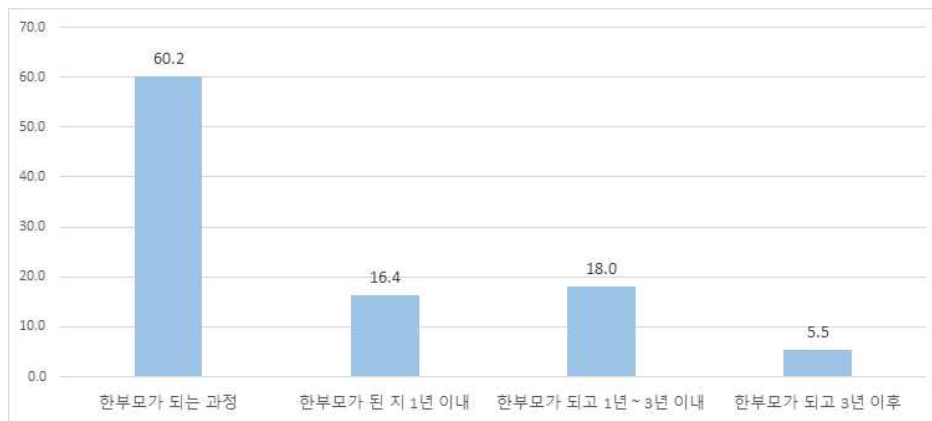
(1)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빈곤으로 어려움

한부모 이후 시기별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한부모로 전환되는 시기, 즉 ‘한부모가 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한부모가 되고 1년 ~ 3년 이내’(18.0%), ‘한부모가 된 지 1년 이내’(16.4%)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부모 지원에 있어 초기 집중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III-9】 한부모 이후 시기별 가장 어려웠던 시기

(n=128, 단위:%)



혼인지위 별로 살펴보면, 이혼의 경우 ‘한부모가 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웃도는 55.2%였으며 비혼 출산의 경우에는 66.7%에 달했다.

또한 이혼을 한 당사자들은 ‘한부모가 되고 1년~3년 이내’가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25.9%로 그 다음이었으나 비혼 출산의 경우에는 ‘한부모가 된 지 1년 이내’(14.6%)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표 III-20 ■ 혼인지위 별 가장 어려웠던 시기

(단위 : 명, %)

구분		시기			
		한부모가 되는 과정	한부모가 된 지 1년 이내	한부모가 되고 1년~3년 이내	한부모가 되고 3년 이후
혼인상태*	이혼 (n=58)	32(55.2)	8(13.8)	15(25.9)	3(5.2)
	비혼 출산 (n=48)	32(66.7)	7(14.6)	5(10.4)	4(8.3)

*폭력 및 수감 등으로 인한 별거 상태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비교 분석에는 제외하였음.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를 물어본 결과, 1순위는 ‘경제적 빈곤’(53.1%)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자녀 돌봄 및 교육’(34.4%)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보았을 경우, ‘경제적 빈곤’이 8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정서적 불안 및 우울’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8%였다.

■ 표 III-21 ■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

(n=128)

이유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정서적 불안 및 우울	45(35.2)	29(35.2)	74(57.8)
경제적 빈곤	68(53.1)	35(27.3)	103(80.5)
자녀 돌봄 및 교육	10(7.8)	44(34.4)	54(42.2)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대한 걱정	3(2.3)	14(10.9)	17(13.3)
원가족 관계 단절	-	2(1.6)	2(1.6)
사회적 관계 단절	2(1.6)	4(3.1)	6(4.7)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물어본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보았을 경우 역시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봄’이 79.9%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청함’이 51.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Ⅲ 표 III-22 Ⅲ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

(n=128)

방법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봄	62(48.4)	40(31.3)	102(79.9)
친구·가족에게 도움을 청함	17(13.3)	31(24.2)	48(37.7)
공공 기관에 도움을 청함	27(21.1)	38(29.7)	65(51.0)
민간 기관에 도움을 청함	7(5.5)	14(10.9)	21(16.5)
아무것도 하지 못함	15(11.7)	4(3.1)	19(14.9)



이 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조사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빈곤 문제로 가장 어려웠으며 돌봄과 정서적 불안 및 우울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 시기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항에서 정의된 바에 따르면, 한부모가 되는 과정은 사별, 이혼, 비혼 출산, 배우자의 노동 능력 상실, 수감 등의 사유로 혼자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부모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수 많은 어려움들은 보여주지 못한다. 특히 비혼 출산의 경우 피임 실패로 임신이 되었거나(〈사례 B-9〉), 남자 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사례 B-5〉, 〈사례 A-10〉), 낙태·양육·입양 등 무수한 선택지를 놓고 불안한 임신·출산기를 보내야 하는 경우(〈사례 C-10〉, 〈사례 B-5〉, 〈사례 B-3〉, 〈사례 B-4〉) 등 매우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2) 자녀가 어릴수록 어려움 높게 나타나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물어본 결과,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이 5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25.0%,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14.1% 순이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돌봄을 혼자 수행해야 하는 한부모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혼 출산 또는 이혼의 과정을 겪는 시기 자체가 자녀 연령이 어릴 때와 겹치기 때문이다.

【 표 III-23 】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n=128)

항목	빈도(%)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	76(59.4)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32(25.0)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18(14.1)
자녀가 대학교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2(1.6)

【 그림 III-10 】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n=128)



혼인지위 별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살펴보면, 이혼과 비혼 출산 모두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49.1%, 83.0%)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특히 비혼 출산의 경우,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83.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앞서 한부모가 되는 과정을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 대한 지원 중에서 비혼 출산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표 III-24 】 혼인지위 별 가장 어려웠던 시기

(단위 : 명, %)

구분		시기			χ^2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혼인상태	이혼 (n=57)	28(49.1)	19(33.3)	10(17.5)	13.06**
	비혼 출산 (n=47)	39(83.0)	6(12.8)	2(4.3)	

주: ** p<0.01

자녀가 대학교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라고 응답한 그룹은 각각 1명으로 제외 후 분석 진행함.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를 물어본 결과, 1순위는 ‘경제적 빈곤’(53.9%)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자녀 돌봄 및 교육’(43.8%)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보았을 경우 역시 ‘경제적 빈곤’이 7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녀 돌봄 및 교육’이 64.8%로 그 다음이었다.

【 표 III-25 】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

(n=128)

이유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정서적 불안 및 우울	27(21.1)	31(24.2)	58(45.3)
경제적 빈곤	69(53.9)	24(18.8)	93(72.7)
자녀 돌봄 및 교육	27(21.1)	56(43.8)	83(64.8)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대한 걱정	2(1.6)	14(10.9)	16(12.5)
원가족 관계 단절	3(2.3)	-	3(2.3)
사회적 관계 단절	-	3(2.3)	3(2.3)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물어본 결과, 1순위는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봄’(52.3%)이었으며 2순위는 ‘친구 및 가족에게 도움을 청함’(28.9%)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보았을 경우,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봄’이 79.9%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에 도움을 청함’이 49.9%로 그 다음이었다. 앞서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비교해 본다면, 자녀 돌봄 관련하여 친구·가족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이 특징적이다.

■ 표 III-26 ■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

(n=128)

방법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봄	67(52.3)	35(27.3)	102(79.9)
친구·가족에게 도움을 청함	11(8.6)	37(28.9)	48(37.7)
공공기관에 도움을 청함	32(25.0)	31(24.2)	63(49.4)
민간 기관에 도움을 청함	6(4.7)	18(14.1)	24(18.9)
아무것도 하지 못함	12(9.4)	6(4.7)	18(14.1)

(3) 비양육부모 연락하지 않으며, 원가족과 일상적으로 연락

지난 1개월간 가족들과 얼마나 연락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 자녀의 비양육부모와는 ‘연락하고 살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한다’(15.9%), ‘해당없음’(12.7%) 순이었다. 부모와는 ‘일상적으로 연락한다’가 32.8%,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한다’ 24.2%, ‘연락하고 살지 않는다’가 16.4%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와는 ‘일상적으로 연락한다’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락하고 살지 않는다’(25.4%),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한다’(24.6%) 순이었다.

【 표 III-27 】 지난 1개월간 가족들과 연락한 정도

(단위 : 명, %)

항목	자녀의 비양육부모	부모	형제·자매
연락하고 살지 않는다	68(54.0)	21(16.4)	32(25.4)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한다	20(15.9)	31(24.2)	31(24.6)
월 1회 정도는 만난다	11(8.7)	10(7.8)	12(9.5)
주 1회 정도는 만난다	4(3.2)	10(7.8)	2(1.6)
일상적으로 연락한다	7(5.6)	42(32.8)	35(27.8)
해당없음	16(12.7)	14(10.9)	14(11.1)

자녀의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68.0%를 차지하였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은 14.1%였으며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은 8.6%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28 】 자녀의 비양육부모 양육비 지급 여부

(n=128)

항목	빈도(%)
지급하지 않는다	87(68.0)
비정기적으로 지급한다	18(14.1)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11(8.6)
해당없음(예: 사별 등)	12(9.4)

(4)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생계, 자립 순으로 수요 높아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1순위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이 3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순위는 ‘한부모가족 생계지원’(29.9%), 3순위는 ‘한부모 당사자의 자립지원’(29.9%)로 나타났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함께 살펴 본 결과,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이 8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한부모가족 당사자의 자립지원’68.4%,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65.9% 순이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는 만족도 및 필요도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및 서비스 측면에서 주거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 표 III-29 】 한부모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1·2·3순위

(n=128)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사회적 차별 개선	27(21.1)	14(11.0)	21(16.5)	62(48.7)
자립 지원	17(13.3)	32(25.2)	38(29.9)	87(68.4)
생계 지원	36(28.1)	38(29.9)	34(26.8)	108(84.8)
주거 공간 지원	40(31.3)	24(18.9)	20(15.7)	84(65.9)
돌봄 서비스 다각화	3(2.3)	12(9.4)	9(7.1)	24(18.9)
네트워크 활성화	2(1.6)	3(2.4)	4(3.1)	9(7.1)
교육 및 상담 서비스	3(2.3)	4(3.1)	1(0.8)	8(6.3)

면접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현재 한부모가족 사회보장 체계가 한부모가족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자립을 위해 무조건 일을 하고 취업 교육을 받으라고 하지만 한부모 당사자로서는 자녀 돌봄을 비롯하여 정서적 우울 등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사 추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다 보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 또한 지적하였다. 특히 주거와 관련해서 정보도 부족하거나와 신혼부부나 자녀 연령, 자녀 수에 제한을 주는 현재의 출산 장려 차원의 주거복지정책은 한부모가족의 주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시설장 서면 조사 주요 결과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현황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 운영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상담소를 포함한 이용시설 4개소, 생활시설 26개소 시설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9개소에서 응답을 하였다. 서면 조사에는 구조화된 문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및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할 수 있는 주관식 문항을 동시에 포함하였다.

표 III-30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면조사 응답현황

(단위: 개소)

가능별		개수	응답수
이용시설		4	-
생활시설	모부자 (기본, 공동)	8	6
	미혼모자 기본	6	4
	미혼모자 공동	11	8
	일시지원	1	1
계		30	19



1) 시설 현황

설문조사 결과, 현재 지원시설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3곳, 비영리법인 1곳이었다. 정원은 평균 11.8세대에 25.4명이었으며, 현재 시설에 거주 중인 세대는 평균 7.3세대에 1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율은 세대 기준 62.2%, 가구원 수 기준 61.6%로 나타나 2020년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III-31】 시설 운영 주체 및 정원·현원 현황

구분		빈도(%), M(SD)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14(77.8)
	비영리 법인	1(5.6)
	기타	3(16.7)
정원	세대	11.79(6.67)
	명	25.39(18.10)
현원	세대	7.33(5.14)
	명	15.65(12.10)

*각 항목은 결측치에 따라 전체 응답 수가 다름.

지원시설의 평균 종사자 수는 4.4명이었으며 생활복지사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설장 19명, 생활지도원 14명 순이었다. 외부 인력은 시설 평균 2.3명이 있었으며 자원봉사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시설 인력 현황

구분	총 인원	
종사자 인력	시설 평균 종사자 수	4.32명
	시설장	19명
	사무국장	10명
	생활복지사	21명
	생활지도원	14명
	간호사	5명
	영양사	1명
	조리사	6명
	관리인	7명
외부 인력	평균 외부 인력 수	2.33명
	법인 지원 인력	2명
	사회복무요원	3명
	자원봉사자	10명
	기타	6명

*각 항목은 결측치에 따라 전체 응답수가 다름.

2) 일가족양립지원제도, 주52시간 도입 관련 시설 대응

생활시설 특성상 현재 인력 구조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의 경우,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 돌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24시간 인력 상주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19개의 지원시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각 1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으로 12곳에서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산휴가를 실제로 활용하는 곳은 8곳, 육아휴직 7곳,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은 3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연근무나 교대제, 당직근무의 경우 도입하지 않은 곳이 도입한 곳보다 절반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들은 직원 수가 현저하게 적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당직근무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시설 종사자들의 당직, 휴일근로와 지난 일주일 동안 초과 근로를 물어본 결과, 당직근무는 평균 4회, 휴일 근로는 평균 1.8회, 초과 근로는 2.9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서비스 공백을 초래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활시설의 특성상 주말과 휴일에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전반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주52시간은 낮근무만 가능하여 직원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또한, 취업을 한 한부모가족 당사자의 경우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주중이나 야간, 주말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표 III-33 】 도입한 제도 및 활용 현황

(N=19, 단위 : 명, %)

구분		도입 여부		활용 여부	
		예	아니오	활용	비활용
유연근무	시차 출퇴근제	5(26.3)	14(73.7)	3(15.8)	16(84.2)
	재택 근무	2(10.5)	17(89.5)	-	19(100.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17(89.5)	2(10.5)	8(42.1)	11(57.9)
	육아휴직	17(89.5)	2(10.5)	7(36.8)	12(63.2)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12(63.2)	7(36.8)	3(15.8)	16(84.2)
교대제	주간 2교대, 3조 2교대 등 모두 포함	4(21.1)	15(78.9)	2(10.5)	17(89.5)
당직근무	22시 이후 근무	6(31.6)	13(68.4)	3(15.8)	16(84.2)

【 표 III-34 】 시설 종사자 근로 현황

(단위 : 횟수)

구분	지난 한 달 평균
당직근무 (n=9)	4회
휴일근로 (n=10)	1.8회
초과근로 (n=14)	2.9회

*각 항목은 근무를 한 시설만을 응답으로 하여 계산함.

3)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

종사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조사에 응답한 19개의 시설 모두 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도 제기되었다. 첫째, 인력의 부족으로 고충 처리에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둘째, 생활시설의 특성상 운영진 입장에서는 생활인들 간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데 있어 어려움, 한부모가족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역량 강화 및 준비를 위한 지도와 생활인 개인의 욕구가 상충하는 어려움 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음주, 외박, 과도하



게 늦은 귀가 등에 대한 지도가 인권 침해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의 의지 및 욕구가 없는 한부모에 대한 개입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극단적인 의견으로는 생활인들의 권리 요구에 대해서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악성 민원인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어려움들은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간의 개별적인 권리 충돌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생활시설 운영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시설 운영 목적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종사자와 생활인들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시설 환경

개별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생활시설과 공동생활시설로 나뉜다. 그러나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는 1인실을 원하는 한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공동형 시설의 경우에도 1인실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야기되었다.

시설장 및 사무국장에게 지원시설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하다는 응답이 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리적 접근성이 낮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1.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빈도로 보았을 때, 지리적 접근성이 낮다는 항목에는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전혀 없었고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에는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2.1%를 차지하였다.

또한 앞서 한부모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설장 등 역시 입소자들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1인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설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표 III-35 】 지원시설 환경 관련 어려움 정도

(n=19)

항목	M(SD)
지리적 접근성이 낮음	1.84(.90)
시설 노후	2.68(1.10)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3.00(1.29)

* 5점척도 이용.

【 그림 III-11 】 지원시설 환경 관련 어려움 정도

(n=19)



5) 지원시설 서비스 현황 및 평가

시설 내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는 각 항목이 19개 시설 대부분에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비용지원’, ‘한부모 당사자 교육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곳이 각각 한 곳씩 있었으며 ‘한부모 당사자 사회적 관계망 강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4곳이었다.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관련된 서비스는 당사자 조사에서도 높게 나타나지 않은 만큼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별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이 4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과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정보제공'으로 각각 28.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대가 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부모 당사자 교육 지원'이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현재 혼인 여부 및 출산 시기로 나누어진 지원시설의 프로그램은 출산 및 신생아 돌봄 시기 지원을 제외하고 매우 흡사하였다. 외부 후원 물품 및 자원 연계에 따라 부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 유형별, 시기별, 자녀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즉 한부모가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한부모 및 자녀의 건강, 연령 등 한부모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한부모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어 프로그램 제공이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Ⅲ 표 III-36 Ⅲ 제공 중인 서비스 현황

(N=19, 단위 : 명, %)

서비스 유형	제공 여부	
	유	무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	18(94.7)	1(5.3)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정보제공	19(100.0)	-
본인 또는 자녀 상담, 치료	19(100.0)	-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	19(100.0)	-
한부모 당사자 교육 지원	18(94.7)	1(5.3)
한부모 당사자 신체 건강지원	19(100.0)	-
한부모 당사자 사회적 관계망 강화	15(78.9)	4(21.1)

【 표 III-37 】 다음 항목에 대한 순위

(단위: 명, %)

항목	예산 소요	이용자 만족	확대 필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	7(46.7)	4(28.6)	3(21.4)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정보제공	1(6.7)	4(28.6)	3(21.4)
본인 또는 자녀 상담, 치료	3(20.0)	1(7.1)	-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	1(6.7)	3(21.4)	3(21.4)
한부모 당사자 교육 지원	1(6.7)	-	4(28.6)
한부모 당사자 신체 건강지원	-	-	-
한부모 당사자 사회적 관계망 강화	-	-	1(7.1)
기타	2(13.3)	2(14.3)	-

*각 항목은 결측치에 따라 전체 응답 수가 다름.

다음으로 지원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어려움’이 4.21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프로그램 이용 시 자녀 돌봄 공백 어려움’에 대해서는 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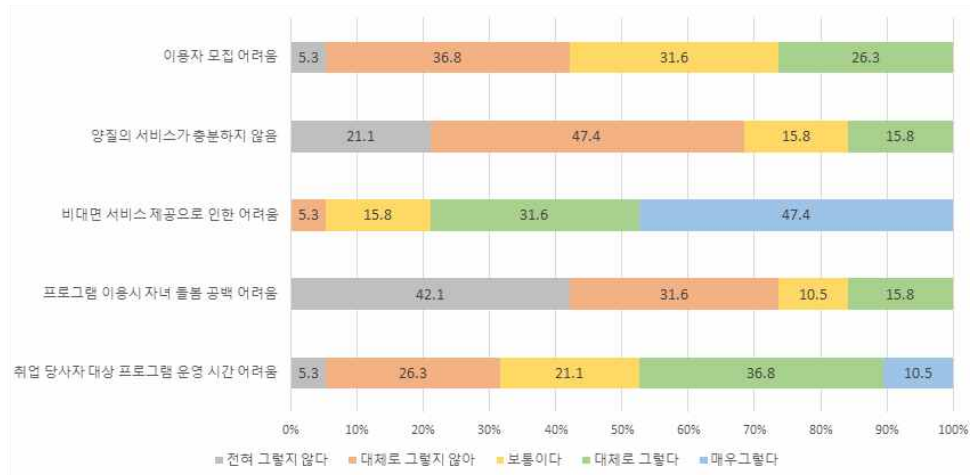
【 표 III-38 】 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관련 어려움 정도

(n=19)

항목	M(SD)
이용자 모집 어려움	2.27(.92)
양질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음	2.26(.99)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어려움	4.21(.92)
프로그램 이용시 자녀 돌봄 공백 어려움	2.00(1.11)
취업 당사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간 어려움	3.21(1.13)

그림 III-12 | 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관련 어려움 정도

(n=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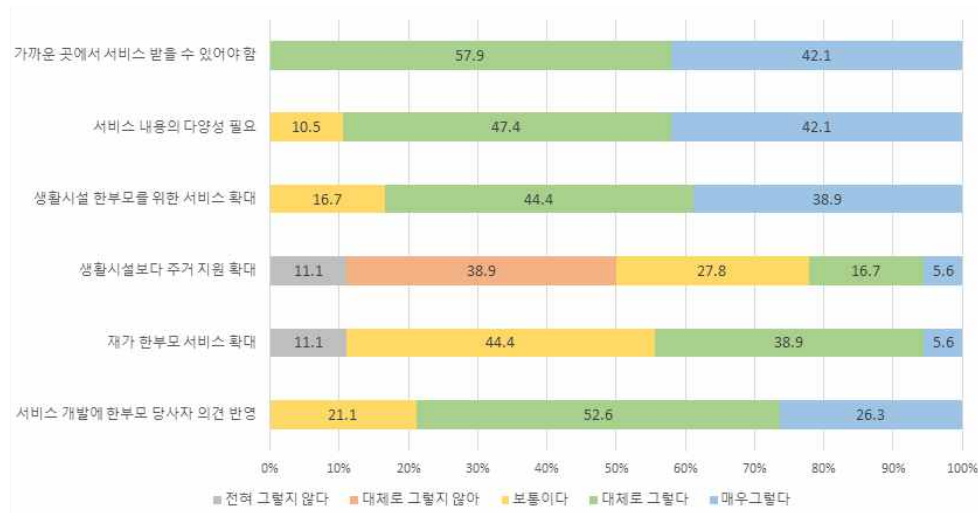
향후 지원시설에서 서비스 제공 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4.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내용의 다양해져야 한다’ 4.32점,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 4.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의 경우,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이 3.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들의 응답은 ‘생활시설보다는 주거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항목이 4.2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시설장 및 사무국장 응답의 경우, 2.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같은 차이는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들의 생활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주거와 자립에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시설을 이용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주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시설장들 입장에서는 생활시설과 주거 지원은 비교 대상이 아닌 다른 서비스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물론 임신·출산 시기를 지원하는 생활시설 이용 한부모 및 시설장인지, 취업 및 돌봄 지원을 위해 일차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한 한부모 및 시설장인지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중 생활시설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요한 주거서비스로 인식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생활시설을 한부모가족 주거서비스로 보기에에는 주거가 불안정한 한부모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며, 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초기 지원시설로 보기에에는 운영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생활시설의 운영 목적이 일반적인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주거 서비스 제공보다는 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한부모를 지원하는 시설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특히 임신·출산 등 초기 한부모의 재생산건강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이 목적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 및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사회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지와 자원 연계가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 그림 III-13 ■ 향후 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개선 방향

(n=19)





6)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시설장 의견에서도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정기간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자립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시설과 장애 등의 사유로 자립 지원이 어려운 한부모를 지원하는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부모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생활시설은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 4.37점, ‘이용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 4.19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시설은 단기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항목은 2.81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부모 당사자의 응답은 모든 항목이 3점대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영인력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항목이 3.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당사자와 운영인력과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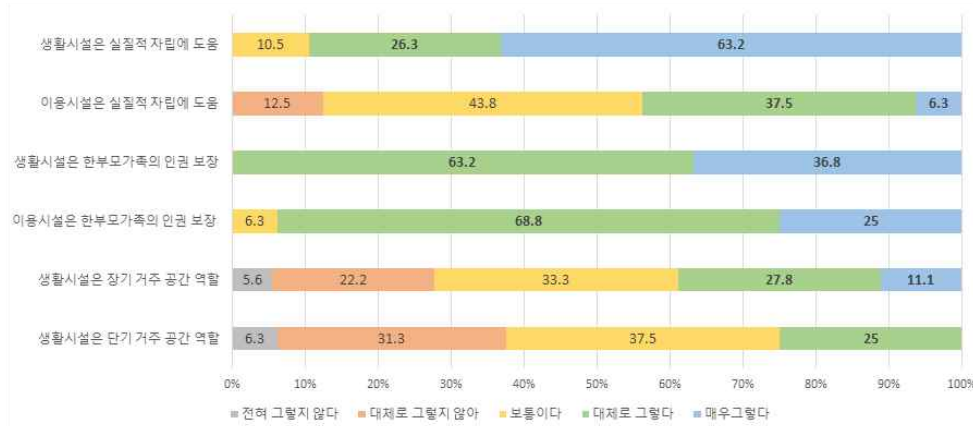
【 표 III-39 】 다음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

(n=19)

항목	M(SD)
생활시설은 실질적 자립에 도움	4.53(.70)
이용시설은 실질적 자립에 도움	3.38(.81)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 보장	4.37(.50)
이용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 보장	4.19(.54)
생활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 역할	3.17(1.10)
생활시설은 단기 거주 공간 역할	2.81(.91)

【그림 III-14】 향후 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개선방향

(n=19)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당사자 조사에서는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당사자와 운영진 사이에 지원시설에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40】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N=18)

구분	빈도(%)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	5(27.8)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10(55.6)
자녀 돌봄·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1(5.6)
기타	2(11.1)

또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1순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57.9%, 2순위 ‘한부모 당사자의 자립 지원’52.6%, 3순위 ‘자녀 연령별 돌봄 서비스 다각화’36.8%로 나타났다. 1순위 항목에 대해서 한부모 당사자와 시설 운영 인력 모두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을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I-41】 한부모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1·2·3순위

(n=19)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사회적 차별 개선	1(5.3)	-	1(5.3)
자립 지원	3(15.8)	10(52.6)	2(10.5)
생계 지원	2(10.5)	1(5.3)	2(10.5)
주거 공간 지원	11(57.9)	4(21.1)	1(5.3)
돌봄 서비스 다각화	1(5.3)	1(5.3)	7(36.8)
네트워크 활성화	-	-	-
교육 및 상담 서비스	1(5.3)	3(15.8)	6(31.6)

이 밖에 시설장 설문조사에서 주관식으로 응답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I-42】 시설장 설문조사 주요 결과

주제	응답 내용
인력, 예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 시간 프로그램 진행 인력 운용 어려움 - 당직, 노동시간제한 등으로 직원 피로도 높음 - 24시간 생활시설 상주직원 필요, 야간 업무 어려움 - 운영비 보조금 통합 집행 필요 - 공유 공간, 기본적인 가전 지원 부족 - 1인 1실 공간 보장 필요
서비스 제공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정신건강 및 장애가 있는 한부모 지원 및 인력 필요 - 재가 서비스는 주거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생활시설 서비스는 안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 - 한부모가족이 시설에 안주하지 않도록 지지와 자원 연계를 통한 다음 단계 응원이 필요 - 산후 우울증 및 아동학대 시 긴급 돌봄센터 필요. 18시 이후로 전화도 안되는 응급 야간 아이돌봄 연결 지원 부재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인권 및 권익 침해 존중 필요 - 생활인들 사이의 갈등 해결: 성격장애 및 감정조절이 어려운 입소자의 경우 원내 다른 입소자들 간의 갈등 상황 해결 역량 강화 필요 - 입소인들의 안전을 우선하여 직원들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함



주제	응답 내용
지원시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 별 특성에 맞춤이 필요: 교육 중, 부채의 경중, 아동의 상태 등 - 단순히 단기, 장기 기간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한부모가족의 욕구에 따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단순히 단기 거주 공간 역할로서는 부족하고, 또 너무 장기로 했을 경우에는 의존성이 증가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는 기준이 필요함
한부모가족 삶의 질 개성을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의 유형, 시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 - 산모의 심신이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산후조리 지원 및 전문가의 심리상담, 고정적인 탁아인력 지원이 필요 - 교육 강화: 경력 개발 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교육, 정신건강 지원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강화 - 법정한부모 중위소득기준의 상향 조정 - 일정기간 무상 주거지원 - 시설 단계별로 한부모가족의 자립 준비 강화 - 공동생활시설에서도 모자시설과 동일한 수급자 책정을 통해, 수급자 지정 후 소득의 기준선에 이르렀다고 수급 책정이 취소되어 취업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수급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 - 한부모가족을 위한 유관기관들과 단체의 연대

4. 요약 및 시사점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의 시설 이용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부모들은 지원시설의 정보를 몰라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0.2%만이 현재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용한 적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32.2%, 전혀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가 37.6%로 세 그룹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들에게 지원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한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원시설을 이용한 한부모들은 시설 이용 중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물품 등의 후원이었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주거가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원시설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도움



이 되었는지 물어본 결과, 자녀돌봄이 3.47점, 안정적인 주거 3.45점, 경제적 자립이 3.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의 기능과 역할 중 한부모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독립적 주거 공간 제공’이었다. 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들에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적당한 주거 자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한 한부모들에게 추후 자립을 위해 주거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립 이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한부모들은 시설 이용 시 부정적인 경험도 함께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생활시설을 이용한 한부모들은 사생활 침해를 이용시설을 이용한 한부모들에 비해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침해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물어볼 결과, 이용시설 이용자의 경우 2.07점이었으나 생활시설 이용자들은 2.73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부모들에게 복시시설이 한부모들의 실질적 자립, 인권보장, 거주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항목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는 면접조사 결과에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개선 방향과 관련한 의견 조사에서는 ‘서비스 개발에 한부모가족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이 3.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혼모와 한부모가 거주하는 생활시설에 구분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이 응답자(49.2%)가 아니라고 응답했고 자녀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63.6%)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한부모들이 자녀 연령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길 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부모가 되는 과정을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60.2%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경제적 빈곤’(53.1%)이 1순위였으며

2순위는 ‘자녀 돌봄 및 교육’(34.4%)이었다. 또한,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으로 59.4%였으며 특히, 비혼 출산의 경우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83.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경제적 빈곤’(53.9%)이 1순위였으며 2순위는 ‘자녀 돌봄 및 교육’(43.8%)이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방법으로는 두 항목 모두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봄’이 1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돌봄을 혼자 수행해야 하는 한부모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혼 출산 또는 이혼의 과정을 겪는 시기 자체가 자녀 연령이 어릴 때와 겹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혼 출산의 경우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이 힘들었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을 고려했을 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비혼 출산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31.1%)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2순위는 ‘한부모가족 생계지원’(29.9%), 3순위는 ‘한부모 당사자의 자립지원’(29.9%)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결과들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한부모들은 현재 주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시설 운영 인력인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19개 시설 모두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원이 충분하지 않아 고충처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생활시설의 특성상 운영진 입장에서 생활인들 간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한부모가족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역량 강화 및 준비를 위한 지도와 생활인 개인의 욕구 상충하는 어려움 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이 4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과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정보 제공’으로 각 28.6%였다. 이는 한부모 당사자들이 시설 이용 시 주거에 가장 만족했



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가장 확대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한부모 당사자 교육 지원’으로 28.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부모 당사자들은 중요도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있어 교육 및 서비스 필요에 대한 응답이 대체로 낮게 나타나 운영 인력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한부모 당사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특히, 앞선 결과에서 한부모 당사자의 의견 반영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개발에 있어 한부모의 의견이 함께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원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어려움’이 4.21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는 항목이 4.22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한부모 당사자들의 응답은 3.9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생활시설보다는 주거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2.6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한부모 당사자들의 경우 4.27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시설 외 주거 지원에 대한 시설운영 인력과 당사자들의 생각이 매우 상반됨을 알 수 있다.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생활시설은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53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생활시설은 단기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항목은 2.81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이용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항목에서 4.1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한부모 당사자들의 경우, 3.12점으로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1순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 57.9%, 2순위 ‘한부모 당사자의 자립 지원’ 52.6%, 3순위 ‘자녀 연령별 돌봄 서비스 다각화’ 36.8%로 나타났다. 1순위 항목에 대해 한부모 당사자와 시설 운영 인력 모두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을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IV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면접조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 조사 개요 및 목적
2. 주요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IV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면접조사

1. 조사 개요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이용자 모두를 포괄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권침해 및 서비스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한부모 당사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접조사 참여자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에서 의사를 밝힌 참여자를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간단한 생애 과정과 노동 이력, 가족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조사 자료에 대한 맥락적 이해 및 심층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조사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V-1 | 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조사 기간	2021년 2월-8월
조사 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 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 33명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생애 이력 (결혼, 출산, 이혼 등) - 가족 관계: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원가족 관계, 현재 가구 구성, 자녀와의 관계 등 - 노동 이력: 현재 일 경험, 코로나 시기 일과 돌봄 대처 방식 - 주거 현황: 현재 주거 환경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종류 및 경험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시 인권침해 경험 및 목격 유무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및 정책 수요
-------	--

면접조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 소재 지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참여자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시설 및 단체를 통해 소개받아 면접을 진행하였다. 인구학적 특징 및 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사전 응답을 받고, 면접조사에서는 사전 응답을 토대로 심층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총 33명의 인구학적 특징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혼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혼출산이 12명, 사별이 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9명, 20대가 6명, 60대 이상이 5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자녀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취학 아동이 10명, 중·고등학생이 5명, 성인이 3명으로 나타났다. 성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라 하더라도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생활시설만 이용한 경우가 12명, 이용시설만 이용한 경우가 10명, 둘 다 이용했다는 응답자들이 11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시간제 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가 11명,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일제 임금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명, 자활 및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4명, 자영업이 2명으로 나타났다.

표 IV-2 | 면접 조사 응답자 분포

(N=33)

구분		인원(%)
혼인 지위	비혼출산	12(36.4)
	이혼	20(60.6)
	사별	1(3.0)
연령	20대	6(18.2)
	30대	9(27.3)
	40대	13(39.4)
	50대 이상	5(15.2)
자녀 연령	미취학	10(30.3)
	초등	15(45.5)
	중·고등	5(15.2)
	성인	3(6.1)
시설 이용 경험	생활시설만 이용	12(36.4)
	이용시설만 이용	10(30.3)
	둘다 이용	11(33.3)
직업	전일제 임금 근로	6(18.2)
	시간제 임금 근로	11(33.3)
	자활 및 공공근로	4(12.1)
	자영업	2(6.1)
	무직	10(30.3)



각 응답자들의 개별 특성을 이용한 시설 유형별로 정리하여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비혼출산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 생활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고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들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이용시설만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비혼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시설을 이용 경험이 없는 <사례 C-10>은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다가 출산을 하였으며 아이의 장애 및 질병으로 병원생활을 하여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

【표 IV-3】 면접 조사 응답자 개별 특성

응답자	혼인지위	연령	자녀연령*	직업	생활시설	이용시설
A-1	비혼출산	20대	미취학	무직	○	○
A-2	이혼	20대	미취학	전일제 임금 근로	○	○
A-3	이혼	30대	중고생	전일제 임금 근로	○	○
A-4	이혼	40대	초등학생	자영업	○	○
A-5	이혼	60대	성인	무직	○	○
A-6	이혼	40대	초등학생	무직	○	○
A-7	비혼출산	40대	미취학	시간제 임금 근로	○	○
A-8	비혼출산	40대	초등학생	시간제 임금 근로	○	○
A-9	비혼출산	20대	미취학	전일제 임금 근로	○	○
A-10	비혼출산	30대	미취학	무직	○	○
A-11	비혼출산	30대	초등학생	시간제 임금 근로	○	○
B-1	이혼	40대	초등학생	자영업	○	X
B-2	이혼	40대	초등학생	무직	○	X
B-3	비혼출산	40대	초등학생	시간제 임금 근로	○	X
B-4	비혼출산	30대	초등학생	시간제 임금 근로	○	X
B-5	비혼출산	20대	미취학	무직	○	X
B-6	비혼출산	20대	미취학	무직	○	X
B-7	비혼출산	50대	미취학	시간제 임금 근로	○	X
B-8	이혼	40대	미취학	시간제 임금 근로	○	X
B-9	이혼	30대	미취학	자활 및 공공 근로	○	X
B-10	이혼	30대	미취학	무직	○	X
B-11	이혼	30대	미취학	자활 및 공공 근로	○	X
B-12	이혼	20대	미취학	시간제 임금 근로	○	X
C-1	이혼	50대	초등학생	시간제 임금 근로	X	○
C-2	이혼	30대	초등학생	무직	X	○
C-3	이혼	50대	성인	시간제 임금 근로	X	○
C-4	이혼	40대	중고생	전일제 임금 근로	X	○
C-5	이혼	40대	중고생	시간제 임금 근로	X	○
C-6	이혼	40대	중고생	전일제 임금 근로	X	○
C-7	이혼	40대	초등학생	시간제 임금 근로	X	○
C-8	사별	50대	성인	자활 및 공공 근로	X	○
C-9	이혼	40대	중고생	전일제 임금 근로	X	○
C-10	비혼출산	30대	미취학	무직	X	○

*주: 가장 어린 자녀 기준

2. 면접 조사 주요 결과

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만족도 및 평가

면접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이용한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정의되어 있는 유형의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 노숙인 쉼터, 가정폭력피해쉼터, 민간지원 긴급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시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출산 전·후 시기를 지원하는 미혼모자 기본 생활시설 이용 경험과 폭력피해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모·부자 시설과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한 경험과 구분되었다.

(1) 안정적 주거 공간 확보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언급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향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례 B-1>은 주거비가 나가지 않고 후원 물품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퇴소 이후 보증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돈을 모으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거기 가면 저는 생계급여로 안 되어 있고 의료급여, 주거급여로만 되어 있는데도 생계급여가 나와요. 그니까 내가 월급의 70% 이상 저금을 하면 생계급여하고 이런 게 나와요.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2인이니까 한 70정도가 나와요. 69만 얼마가. 그러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집값도 안 나가지, 전기 이런 거는 제가 내야겠지만 일단은 주거비가 많이 안 드니까. 그리고 그 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만 꾸준히 하면 그 돈은 다 모아지고. 또 애한테 나오는 장학금 같은 것도 다 모아지고. 그니까 열심히만 하면 한 1억 모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전에 어머니들도 열심히, 직장을 팔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은 거의 칠팔천 모아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직업을 못 잡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업을 못 잡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많고 그러면, 이제 그런 엄마들은 힘들지(<사례 B-1>).

물론 면접 참여자 중에서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칠팔천 모아서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퇴소 이후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최소한의 보증금

을 마련하지 못해 금융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 돌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사례 B-1>와 같은 경우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거나 본인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자산 축적의 계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

(2) 실질적인 자립 지원 부족

한부모들이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주거비 걱정 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취업을 통해 이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며 시설 거주 기간이 끝났을 때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70%를 저축하고 2년 거주 기간을 맞춰야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이 아닌 교육을 선택한 한부모는 자립정착금을 받기 어렵다. 또한 중간에 임대주택의 기회가 와서 퇴소를 원할 경우, 2년을 채우지 못해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례 A-2>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개별 가구 상황에 맞춘 적극적인 주거 정보를 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였다. 시설에 거주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자립에 필요한 주거, 일자리 등의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한 것이나 지역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정해진 기간에 시설에 거주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구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정보는 전혀 듣지도 못했고. 심지어 다 같이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주변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었어요. 그럼 충분히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못하겠으면 섭외해서 모여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거복지센터도 거기가 너무 협조 안 해줘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런 입소 확인서라든지 확인이 될만 한 서류를 증빙해서 내야 하는데 모자원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상담하기 힘들고. 대부분 상담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증금 때문에 안돼서……(<사례 A-2>).

주거의 중요성은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한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활시설이 주거 공간을 제공할 뿐, 장기적인 주거 대책을 위한 정보 및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3) 정서적 치유를 통한 삶의 전환점 계기 마련

한부모들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치유를 받기도 한다. <사례 B-2>는 현재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이야기하였다.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가 지금 아이랑 같이 서로 웃고 떠들 수 있고 이런 시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사례 B-2>).

<사례 B-2>는 자녀가 7세 무렵 이혼을 하였으며 이혼과 동시에 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이다. 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한부모가 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지지를 해 주는 시설장 및 종사자들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생활시설에서는 상처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상처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프로그램이라던지 각계각층에서 시설에 와서 심리적 치료, 그런 교육 같은 것, 긍정적인 방향 같은 거 제시하고. 이러한 생활시설이 모태가 돼서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생활시설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생활시설을 거쳐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제가 받은 혜택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이의 주거 공간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사례 B-2>).

<사례 B-2>는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운이 좋은 편”에 속하며 아직도 이런 시설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한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고지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모든 한부모에게 이와 같은 시설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의견을 내었다.

이 밖에 출산 직후 초기 양육 지원하는 미혼모 시설에서 신생아 건강 및 자녀 양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점, 개별 상담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부모들과 집단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 등 긍정적인 경험들이 이야기되었다.

2) 생활시설 이용 경험 및 개선 의견

(1) 공동체 주민으로서의 존중 필요

비혼 출산, 폭력피해,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한부모가 된 여성들이 말 그대로 “애와 함께 길거리로 나 앉게” 생겼을 때 무료로 거주할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취약함은 그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무시와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했다. 오랫동안 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사례 B-3>는 생활시설의 가장 큰 서비스인 “주거”는 시설의 “포커스이자 맹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게 포커스인데, 포커스이자 맹점이에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너 와서 내 말 들어라. 내가 준비 오는 것만 피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사례 B-3>).

<사례 B-3>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후원 물품을 지원받자, “미혼모가 뭐 대단한데 저런 거 받고 다니냐, 네가 자립해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외부에서] 분유나 기저귀나 이런 생필품을 지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계속 택배가 오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저렇게 받냐고 지지분하게, 이러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받는 거죠. 버리려고 받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고선 ‘미혼모가 뭐 대단한데 저런 거 받고 다니냐. 네가 자립해라.’ 2,3살 애기를 데리고 뭘 자립을 해요. 개꿀 뜯어먹는 소리지. 무슨 출산율이 어찌고저찌고예요(<사례 B-3>).

<사례 A-2>는 생활시설이 일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한부모들의 연대나 단합을 위하기보다는 관리를 위한 집합시설이라는 점을 지적

하였다.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주택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를 받음으로써 “건강했던 사람도 피폐해져서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집단으로 단합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그들을 위한 공동체인거잖아요. 차라리 주거 공간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시설에서 입소자로 주인도 아니고 주택 들어가면 주택도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애. 뭔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도 아니고. 그니까 있을수록 역량강화보다는 건강했던 사람도 피폐해져서 나오겠다는 생각이……. 자꾸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고 나를 계속 의심하고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니까. 자꾸 의식하게 되고(<사례 A-2>).

<사례 A-6>는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겪었던 부당함을 “갑질”로 표현하였다. 종사자들은 생활인들을 “상하관계”속에서 이해하고 그들에게 “야단을 치는” 사람들이었다. 입소자들에게 생활시설은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심리적 손상의 회복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기보다는 다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상하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야단을 쳐요, 사무실 직원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죠!’ 야단을 쳐요. 사람이 힘들어서 나왔는데 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돈이 제일 커요. 돈이 없어서 알바가 생겼어, 좀 갔다 와야 돼. 근데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요. […] 우리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기들이 되게 막 우리를 감시하는 대상이고. 그런 대상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 인권적으로? 인간적으로 존중을 많이 못 받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사례 A-6>).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한부모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더 불편을 감내해야 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퇴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모자원에서 센터장님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런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랑 어떨

게 사이가 안 좋은지 그거에 따라서 거의 내 인권이 없고 막.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처리를 받고 무조건 퇴소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곳도 있다는 글을 보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사례 B-4>).

(2) 개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함

모자원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독립적인 거주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였다. 가스 검침 및 방역 등의 이슈로 방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나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날도 가스 점검하는 날이었고 연락을 주지 않았고 문을 그냥 따고 들어와서 저는 그때 방 안에 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따는 소리가 나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별에 별 생각에……. 근데 그 날에 씻고 있던 엄마도 있었던 거예요. 애는 어린 이집 보내놓고. 그리고 거기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스 검침원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갔을 때는 그 아저씨가 ‘검침 좀 할게요.’ 이라고 들어왔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줌마가 세대마다 문을 다 따고 있었던 거예요(<사례 A-2>).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에 사는 한부모들은 “강박증”이 생기고 종사자들의 관리는 “시월드”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들이 강박증이 심하고 심지어 밥 먹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요.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저도 참 시설장 사는 데 가서 해보고 싶더라고요. 똑같이.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 (<사례 B-3>).

집단생활을 하는 데다가 방역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개별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한부모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각자 방을 쓰잖아요. 만약에 방역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없더라도 거기 마스터키가

있기 때문에 열고 들어올 수 있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현찰이나 이런 거 다 놔두잖아요. 근데 그 분이 언제 들어왔다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 있으니깐. 그런 것들이 싫더라구요, 나는. [...] 여기는 내 집이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그니까 남의 집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방역이든 뭐를 하든. 그런 거는 좀 존중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사례 B-1>).

<사례 B-12>의 경우에도 확인해야 하는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집안 점검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안 점검도 하시고. 뭐 확인하고 싶으시면 있을 때 오시면 되는데 자꾸 그냥 들어오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약간 불편하더라구요(B-12).

이 밖에 배달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 등 과도한 생활 규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3) 가정생활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원이 필요

생활시설 이용자들이 이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의 내용에는 개별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 공간을 함부로 들어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부모의 가정생활에 대한 간섭과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례 B-7>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이 아동학대를 빌미로 한부모를 통제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영유아 양육 과정에서 방에 짐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두고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거기에서 두 명이 살고. 집은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옷가지 몇 개밖에 없었지만. [...] 애가 이제 애가 되다 보니까 장난감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베란다도 딱 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되는 공간에 사실 (살림살이를) 놓아봤자 얼마나 놓겠습니까. (저보고) 짐이 많다고. [...] 3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러면, 살림이 안 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베란다가 이렇게 들어갈 통로도 없게 만들어놨다고 내보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나올 무렵에. 날짜가 딱 돼서 안 나가니까 그걸 딱 찍어서 일주일에 한 번 씩 점검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아동학대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권 침해입니까(<사례 B-7>).

실제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퇴소 후 자녀와 분리되는 경험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사례 B-3>)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집이 엉망진창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사례 C-10>).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는 <사례 C-10>은 어렵게 연계된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이후,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서비스 확인 전화만 오고 아이돌보미는 돌봄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결국 정작 필요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만 힘들어졌음을 호소하였다. 한부모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은 한부모를 지원하는 사람이기도 하나 언제라도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부모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시 이와 같은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돌보미는 일 년 만에 구해서 왔는데 네 시간 있다가 왔는데 저희 집이 엉망진창이라고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서……. 네 시간 왔다 가셨는데 저를 주민센터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 이제 7월 1일 날 왔다가, 자기가 7월 1일까지 해보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래놓고 7월 2일 날 아침에 애 열 나서 못 할 것 같다고, 자기 그냥 안 하겠다고. […] 그다음 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자활 센터에서 와서 매주 집을 청소를 한 번씩 해주고 가시는데 그거 서비스 안 받고 계셨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랬다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서비스 잘 받고 계신 거 맞냐고 막 그러면서. […]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정부 그거다보니까 돌봄 선생님이 스케줄보고 애 상황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요. 까다로우면 안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 년 만에 구해진 건데(<사례 C-10>).

<사례 B-11>의 경우에도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일상적인 관리 차원에서 시설 종사자들의 방문이 “집안을 검사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사례 B-11>은 시설 거주 조건이 일과 돌봄, 집안일은 모두 해내야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혼자 다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4) 실질적인 자립과 역량 강화가 필요한 프로그램 필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들은 정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보고해야 했다고 한다. 소득과 저축 금액뿐만 아니라 통장 내역 및 카드 명세서, 임금 내역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A-7>, <사례 A-2>). 이 같은 일상의 통제를 <사례 A-7>은 시설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옥소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사례 A-2>의 경우에도 경제 교육의 일환이라는 이름으로 사소한 지출 내역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계부를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매달 급여를 받는 통장을 정리해서 내가 당근을 500원짜리를 샀는지, 팬티를 1000원짜리를 샀는지까지 한달 내역을 다 정리해서 가계부에 의류비나……. 결혼식장 같은데 가면 청첩장도 같이 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여기 무슨 재소자도 아니고 통장 내역까지 왜 정리해서 내야하지 싶어서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건 어쨌든 수급자들만 생계급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수급자가 아닌 가구도 있었어요. 근데 수급자가 아닌 가구도 지출내역을 써서 가계부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나는 신용카드 쓰는데 수급가구도 아닌데 내가 그럼 그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뽑아서 가져다줘야 하는 거냐. 이게 지금 가계부가 무슨 의미로 있는 거냐. 우리 지금 다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수급비야 지원센터 주는 거니까 100번 이해한다 쳐도 자기는 왜 그걸 내야 하나고. 그래서 그 엄마는 안 했어요.(<사례 A-2>).

<사례 B-7>은 이 같은 시설에서 한부모를 “막 대해도 되는 사람,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시설장 가족들이 “갑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우리를 한 사람 인간으로도 안 본 거예요. 한 마디로 하찮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다 그렇더라고요. […] 자기들은 갑인 거예요. 우리들은 을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도 세습이거든요. […] 그 가족들이 넓은 공간을 자기들은 그러고 살면서, 우리한테는 진짜 코딱지만한 집……(<사례 B-7>).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시기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에 필요한 소득 확인, 퇴소 이

후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제교육 등이 실시된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그램이 당사자 입장에서 감시와 통제로 여겨지는 것이라면 그 목적과 방법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5) 지원시설 종사자 젠더감수성 강화 필요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젠더감수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사례 A-9>은 체형 및 외모를 어머니 역할과 연결시켜 지속적인 비난을 들어야 했다고 한다. <사례 A-9>은 “똥똥해서 기저귀를 갈아 주지도 못하고 나중에 아이가 부끄러워 할 수 있다”, 임신 중 부적절한 처사로 아이를 “고생”시키거나 “젓값”을 받아야 하는 엄마라는 식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야 했던 일들이 인권 침해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인권침해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체형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게을러서 애를 어떻게 키우겠느냐는 등 뭐 이런 것들? [...] 이렇게 똥똥해가지고 엄마가 나중에 학교 오면 애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몸이 무거운데 애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주느냐.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인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있으면 그런 거 먹으면 애기가 나와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데, 너는 그것을 애한테 어떻게 젓값을 갚으려고 하느냐 라는 등 그런 것들? 그리고 애기가 태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도대체 엄마가 임신 중에 뭘 먹고 돌아 다녔길래 애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라는 것들(<사례 A-9>).

<사례 B-10>는 시설 내에서 종사자들이 엄마들의 외모를 계속 평가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면 당사자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례 A-4>는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시설 종사자가 방에 불쭙 들어 왔다가 샤워를 하고 있던 자신을 보고 “몸매는 예쁘네~”이런 말을 하고 나가는 것을 들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의 곤란함 때문에 <사례 B-12>은 갑작스런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오분 대기조로 속옷까지 다 착용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갑자기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면 난감할 때도 있잖아요. 씻고 있는대던가 옷을 편하게 입고 있는대던가 해서 한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성희롱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연구자: 성희롱적으로요?) 본인은 인식을 못 하시는데 오분 대기조로 속옷까지 다 착용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니까(<사례 B-12>).

실무를 담당했던 여자의 비리가 많은데, 제가 겪은 것을 말하면,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으면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몸매는 예쁘네” 이렇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간섭이 대개 많았어요(<사례 A-4>).

이 밖에 폭력·학대 예방 교육 등 외부 강사 교육 진행 시 불필요한 폭력 피해 묘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도 있어 시설 내부 종사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인력의 역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 시설 운영에서 당사자 의견 반영 필요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 많은 한부모들이 현재 시설 운영 구조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례 A-9>은 한부모들의 다양한 배경과 욕구가 시설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초 상담을 통해 일차적인 욕구 파악 및 의견 수렴을 하지만 그것이 시설 운영에 반영된다기보다 시설장 재량에 맡겨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초 상담을 해야 된다고 다 얘기는 하고 뭐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거를 상담을 한 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매번 데이터를 뽑아내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그 데이터가 가치가 있게 발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의문이거든요. [...]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다 한 곳에서 묶어놓고 똑같이 지원금만 주면서 센터에서 알아서 운영하세요, 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사례 A-9>).

나아가 시설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퇴소 협박”을 받기도 하거나 민원을 넣을 경우, “보복”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사례 B-7>).

사람을 완전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엄마들은 그냥 너무 원장한테 부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나가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대요. ‘집 구해서 나가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대요. 그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사례 B-7>).

시설 내에서 문제 제기자에 대한 “낙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 A-9>도 이야기를 하였다. 낙인이 찍힐 경우, 시설장 재량의 후원 등에서도 제외가 될 수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입소자들 사이에서 낙인이 찍히거나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는 개인 후원자가 있잖아요. 그런 개인 후원자가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없는 분한테 연결해서 몇 년 동안 내가 지원을 해주고 싶다, 하면 그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센터장이 봤을 때 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애는 어떤 교육적인 자산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애한테 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 개한테 가는 거예요. [...] 저는 개인 후원자를 센터에서 한 번도 매칭해준 적이 없어요(<사례 A-9>).

시설 운영 차원에서 관리가 쉬운 한부모들, 예를 들어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거나(<사례 B-7>) 폭력 피해 등 긴급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한부모들의 입소가 늘고 있다는(<사례 A-7>) 평가는 당사자가 시설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3) 주거 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필요

(1) 주거 서비스 양적 확대 및 다각화: 임대주택 신설, 추가 등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삶의 질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거만 안정된다면”이라는 말을 하나 같이 이야기하였다.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어야 일자리와 돌봄 등 자립을 위한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주거만 안정된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일자리 찾는 거야 당장 편의점 알바를 하든.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면 되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조금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주거 안정성을 찾는 건 내가 분주하게 움직여도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

요. 그리고 저도 가장 먼저 애를 키우고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 내가 이혼을 결정했고 이제 나 어디 가서 살지?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사례 A-2>).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사례 B-6>).

주거만 안정 되어도 그래도 조금 살아가기가 편해요. 주거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저 이 집에서 쫓겨난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잘못하면 나 이집에서 쫓겨나면 나 어디가지?’ 이거거든요.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크니까 더 그런 거예요. 시설에서도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사례 C-4>).

생활시설을 이용한 한부모들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으나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시설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이 확대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현재 생활시설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다는 긴급 주거 지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거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니까 밖에 나와 살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근데 시설에 있으면 또 나태해져. 열심히 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아닌 엄마들은 보조금 타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엄마들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래야 되지.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그냥 지역사회 일원으로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나아요. 시설에 있는 그렇게 보장을 해준다면 그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뭘 해서라도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그니까 나태하게 사람들을 놔두지 말고. 진짜 정신 차리지 않고 살지 않으면 3년 금방 가는데 3년 정말 금방 가요. 근데 나올려고 하면 그게 또 하나 걸리는 거잖아요. 그니까 차라리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지원을 해주고, 어차피 그게 그 돈이잖아요. 시설에 들어가면 어차피 국가에서도 그걸 또 보조해주고 하면 그게 그 돈이야. 그러면 차라리 주거 매입임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그거만 보장되면 얼마든지 나가서 살 수 있거든요(<사례 B-1>).

<사례 C-2> 역시 현재 시설처럼 공동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확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아픈 아이들이 있는 경우, 취약한 주거 환경은 정책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주거를 임대나. 사람이 공동체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아닌 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

IV

자센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해피빈에 기부를 하려고 보는데. 저는 제가 아프니까 소아암만 골라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주거가 문제인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부 문제라 아니라 정책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세우면 되는 걸……. 왜 이걸 기부해야 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사례 C-2>).

(2) 공동 주택: 커뮤니티 공간 및 전문서비스 제공

주거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임대주택 확대와 동시에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사례 A-7>은 현재 시설과 같은 규율과 제약이 있는 주거 공간보다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공동주택을 제안하였다. <사례 A-5>은 한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제안하였다.

운동과 연결지어 운동을 내세우면서 정신 문제를 다루는 거죠. 아무리 좋은 모자시설도 운동 공간은 없어요. 그런데 정신 병원에서는 운동치료 파트가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햇빛 쬐면서 30분 걷기. 운동 치료가 정신 치료에 들어가요(<사례 A-5>).

<사례 A-2>는 “전 생애적으로 시설을 전전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원주택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지원주택 내에는 거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지원인력이 상주하고 필요 시 외부 돌봄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델이 지원주택 서비스야 전생애적으로 시설을 전전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지원주택 서비스가 유형이 많거든요. 의료안심 지원주택 서비스 해가지고 신내동에 서울형 지원주택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밑에 그런 서비스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도 존중하고, 그리고 외적인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면 지원주택이 의료안심 지원주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전문성 있는 의료 사회복지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회복지사도 있을 것이고, 앞에는 의료원이 있는 이런 체계인 거예요. 한부모도 있긴 있어요(<사례 A-2>).

<사례 A-11>는 이와 같은 지원주택에 현재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와 같은 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긴급 돌봄 시 이용 할 수 있는 돌봄 공간 및 인력의 필요성을 지적한 한부모들도 많았다(<사례 A-7>, <사례 B-3> 등).

(3) 긴급지원 필요: 주거 및 생활자금 등

한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서비스에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서의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긴급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당장 갈 곳이 없는 한부모들이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중간의 집”(〈사례 A-11〉)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긴급지원주택은 시설 이용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 요점이다(〈사례 A-10〉). 〈사례 A-2〉는 긴급지원주택에서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화 계획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사례 A-2〉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생활시설이 장기적인 자립보다는 시설에 “주저앉게”만 든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긴급주거지원식으로 써먹는 건 몰라도 아예 그렇게 몇 개월을 거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이 존재하는 거는 저는 퇴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거기를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역량이 강화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주저앉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내면이 아프고 내가 스스로 자립할 힘이 없다면 그런 형식의 공동체 시설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게 18개월씩이나 장기간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긴급주택지원 형식으로 활용해도 거기에서 걸쳐있으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동안에 살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는 괜찮을 것 같은데……(〈사례 A-2〉).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례 A-5〉이 언급한 것처럼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아무도 없는 청소년들이 “이십만원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액 긴급지원인 “개미 은행”과 같은 제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아니면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진짜 저소득인 애, 정말 부모 없고 언니 오빠 없는 애들이 작은 액수를 빌리기 위해 성매매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을 국가가 떼인다 생각하고 빌려주고, 갚으면 상주고, 그런 개미 은행이랄까. 시설에 있는 애들 잘 차려입고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요. 술 마시고 카톡을 보내요. 자기가 이십만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자괴감이 드는 거죠. 또 저는 그 애들이 물건 판다 하면 다 사주는데, 꾸준하게 일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시설장 장로님은 돈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하는데, 누가 하고 싶어하냐고요(A-5).

(4) 한부모 특성 고려한 주거 정책: 자녀 연령 기준 검토

한편 주거 정책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기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립적인 공간을 요구하는 청소년을 위한 주거수요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주택 조건에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데 그 이후, 초등학교 이후, 그때 또 많이 헤어지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한부모가 되고 나서 주거의 조건이 열악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린 아이 양육하는 분들은 낫죠,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초등학생 양육자, 중학교 고등학생 양육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들은 방이 필요하고, 그 아이들은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6세 미만인가?(<사례 A-3>)

<사례 A-2>가 지적하듯이 한부모가 자녀가 6세 이전에 임대주택 정보를 알고 준비를 해서 지원하기도 쉽지 않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자녀가 미취학인 시기는 한부모들의 어려움이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청할 때도 조건도 좀 바뀌야겠죠. (연구자: 매임임대? 긴급주택?)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임대주택이 6세 이하의 법정한부모가 1순위예요. 그럼 사실 미취학아동보다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려면 한달에 3,400은 그냥 깨지는데. 그러면 그런 한부모들은 더 주거에서 멀어지고. 근데 사실 6세 이전에 이런 정보를 접해서 이렇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니까 그 6세 기준도 어디서 따온 건지는 모르겠는데(<사례 A-2>).

(5) 자립을 위한 주거 로드맵 필요

면접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한부모가 된 이후 자립을 위한 주거 안정, 일자리, 돌봄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생활시설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실제 생활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고 해도 이들이 모두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례 A-2>는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개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 상담에 기초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구 상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심층적인 상담을 안 해봤어요. 들어가서 자립을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심층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준비해서 무엇을 하고 싶고 그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18개월 동안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심층적으로 상담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건덕지를 꺼냈을 때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아 그래? 이렇게 흘러드는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심층상담이라고 이야기할만한 뭔가 그런 게 없었어요(<사례 A-2>).

<사례 A-2>는 장기적인 주거 로드맵은 청소년 지원시설부터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본적인 자립에 필요한 주거 정책 정보 교육이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생활시설에 살면서도 다른 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자립정착지원금이 나오는 기간을 채우는 것 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 시설부터 그런..... 시설은 스스로 자립을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 시설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세를 어떻게 내는지 부동산을 어떻게 계약하는지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 아무도 정보제공 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시설에서 살아야 하고. 당연히 18개월을 살아야 돈이 나오니까 18개월을 살아야 하고. 사실 그 시설에 있는 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도 원룸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최저주거기준 미달이에요. 거기 지자체,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저주거기준 미달인데 발굴하라고 해놓고는. 근데 이게 시설에다 돈을 퍼주고 있으면 이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도 들고(<사례 A-2>).

4) 한부모가족 초기 집중 지원 필요

(1) 고립된 여성의 임신·출산 지원 기능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은 미혼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많다. 특히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혼 출산 여성들에게 미혼모 시설은 안전한 출산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지원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임신을 인지하고 출산에 이르기까지 임신 종결, 출산, 양육, 입양 등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심리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을 이용한 한부모들 중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알게 되어 임신 중단, 출산 및 양육, 입양 등의 선택지를 두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출산 및 입양의 선택지만이 남아 미혼모 기본생활을 이용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사례 B-5>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설 종사자의 전화 한 통이 ‘위로’가 되어 출산 이후 양육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임신했을 때, 임신인지도 몰랐던 거고. 나중에 임신인 걸 알았는데 이제 그때는 병원 가서 하기에는 아, 이거는 5주가 지나가지고 안 된다, 5주가, 11주가 지났나? 암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큰 병원을 가서 해줄 지를 모르겠다, 그러더니 큰 병원에선 6개월 안에 된대요. 근데 이제 비용이 200만원인 거예요. 근데 당장에 200만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계속 몸은 안 좋지, 입덧은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냥 같이 죽을까 하다가, 진짜……. 오만, 오만가지 생각 다 하다가. 이제 막달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임신 7개월 차 돼서 7,8개월 될 때죠? 8개월 됐는데 이제는 주변에도 못 숨길 정도로 커졌거든요? 배는 점점 나오고. 근데 다행히 배가 막 애도 아는 건지 막 심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다가, 미혼모 센터 찾다가 *** 알게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 전화 받으신 숙직 선생님이 진짜 막 너무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로 들어가야겠다. 아마 그 때 전화 받으신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한강 가서 뛰어내렸을 거라고. 그 선생님이 그 전화, 그 밤에 걸었던 전화 한 통에도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고,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입소를 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입양을 보내려고 했죠. 왜냐하면 애정이 없으니까(<사례 B-5>).

<사례 B-6>도 임신을 알았을 때, 낙태, 입양, 양육 등의 선택지를 두고 갈등과 고

민을 하다 출산에 이르게 된 경우이다. 청소년 시기 보육원 경험이 있던 <사례 B-6>에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내 돈주고 못 사먹는’ 현실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시기 미혼모 시설의 도움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과 교육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제가 임신을 하고 솔직히 저는 지을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못 지우겠는 거예요. 병원도 많이 갔었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막달이 된 거죠. 애기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지우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입양을 보낼까? 하다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사먹는데 내 새끼를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에 그 동생한테 물어봤죠. ‘내가 있었던 시설이 어디냐.’ 그런 시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부모센터인가 거기에 전화해서 혼자 집을 쓰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을 가르쳐 주셔서 들어가게 됐죠. 저는 청소년 시기에도 보육원에서 지냈거든요. 20살 때부터 일을 했고, 나는 덜 놀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내 돈 주고 못 사먹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새끼를 키워?’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사례 B-6>).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게 된 <사례 B-12>는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었다고 한다.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폭력은 혼인신고보다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처럼 출산 직전까지 혼인신고를 둘러싼 갈등,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해 힘들었던 가정생활을 하던 <사례 B-12>는 자신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내가 혼인신고를 안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시어머님이 혼인신고를 (몰래) 했어요. 중간에 크게 위협적이다 싶을 정도로 몸싸움이 있어서 제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성급하게 시키시더라고요. 남편이 폭력성이 있어가지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차라리 혼자 시설 가서 혼자 낳고 싶다 할 정도로. 집을 나올 때는 거의 만삭이었어요. 출산 2주 앞두고 나왔어요. 그 곳에 있는 동안 편했어요. 선생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사례 B-12>).

(2) 비혼 출산에 대한 달라진 인식 반영 필요

안전한 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은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을 이용했던 한부모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 역할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미혼모 시설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사례 A-9>는 안전한 출산을 위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였다. 그러나 비혼 여성의 출산 경험을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설 관계자들이 출산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적 지원 제공을 거부하여 고통 받았다고 한다. <사례 A-9>는 일보다 양육에 집중하길 바라는 남자친구와의 결혼 생활보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출산 및 초기 양육 지원을 위해 시설 거주를 택하였지만 시설에서는 출산 과정에서 오히려 <사례 A-9>의 출산 사실을 숨겨야 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제가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2박 3일 동안 혼자 계속 진통을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수술을 해 달라.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만약에 네가 수술을 했었을 때 이렇게 자국이 남으면 네가 나중에 애기를 입양시키든 아니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 상처를 보고 너에 대한 마음이 식을 거라면서, 수술을 거절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그 시설 관계자 선생님한테도 들었고, 시설 관련 소속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거절을 제가 몇 번이나 당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드니까 진통하는 와중에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제왕절개) 받고 싶다. 여기서 내가 살아나가야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내가 입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살아야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정말 나는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계속 진통을 하다가 결국에는 애기가 안 나와서 응급으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제왕절개를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 그 상황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돼요. 사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시설에 들어간 거였는데(<사례 A-9>).

이 밖에 신생아 돌봄 및 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아이가 아픈 경우에는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3) 임신·출산 시기 지원

면접에 참여한 한부모에게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과정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사례 B-3>는 임신 당시 남편과 가족들은 모두 낙태를 종용하였고 출산

시 이용하였던 미혼모시설에서는 입양을 권유하였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일부러 ‘고립’을 자초하기도 한다. 임신 초기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부모가 낙태를 강요할까 두려워 일부러 임신 사실을 숨기기도 하였다(〈사례 A-1〉, 〈사례 A-7〉). 〈사례 A-7〉은 임신 기간 동안 절에서 거주하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엄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사례 A-1〉도 양육을 결정한 이후에는 엄마가 낙태를 강요 할 것이 걱정되어 낙태가 불가능한 시점까지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하였다고 한다.

열아홉 살 연말에 처음 임신인 것을 알았고. (침묵) 그 때, 낙태해야겠다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낳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기를 죽일 수 없다, 그런 생각? 어차피 나도 성인이니깐 내가 이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낙태 병원에 가서 떼라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웃으면서) 한 20주까지는 속여 볼까? 그 때 되면 못 지우지 않을까?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사례 A-1〉).

비혼 출산 양육을 지지하는 사회적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숨기기도 하지만 임신 인지 이후, 아이를 원하지 않는 남자와 자신의 출산을 지지하지 않는 원가족 사이에서 갈등에 놓인 채 고립된 여성들도 있다. 〈사례 B-4〉는 임신 사실을 처음 알고 나서 스스로도 “좀 무서웠다”고 한다. 임신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남자 친구의 첫 마디는 “애를 지우지 왜 낳느냐”는 것이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B-4〉는 출산과 임신 종결이라는 결정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사례 B-4〉는 자립을 할 수 있다면 혼자서 양육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 〈사례 B-5〉의 경우에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였기 때문에 출산을 원하지 않았다. 비용이 부담되어 결국 출산 이후 입양을 결정하고 시설에 입소하였다가 양육을 하기로 마음을 바꾼 경우이다. 〈사례 B-9〉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경우이다. 〈사례 B-9〉는 임신 사실을 인정한 직후, 양육 의지가 없었으며 출산 이후에서 입양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출산한 병원 직원이 양육 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설득해 직접 양육을 선택한 경우이다. 〈사례 C-10〉 역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자 친구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어 힘들었다고 한다. <사례 C-10>도 출산 이후 입양을 보낼 생각으로 입양기관의 상담을 받고 출산을 하였다고 한다. 출산 이후에 남자 친구는 “나는 낳지 말라고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양육 책임을 회피하였고 아이는 중증 질병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했다. <사례 C-10>는 자녀를 혼자 키우기로 결정하였다.

비혼 출산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거나 어쩔 수 없이 출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어도 임신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신체적 변화에 더해 임신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임신 종결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이나 모성 신화에 기초한 결정보다는 임신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자립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4) 폭력 피해 한부모여성 집중 지원

한부모가 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그 과정에서 한부모와 자녀가 트라우마에 가까운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한부모에게 시설에서의 경험은 그 이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A-3>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 지원시설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독서 등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시기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원의 서비스는 한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일을 통해 자립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기 보다는 폭력 피해를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시되었다고 한다.⁹⁾ <사례 A-3>은 시설에 머무는 동안 경험했던 지지덕분에 자신이 한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한다.

지금 제가 다른 시설은 모르겠는데, 이 가정폭력피해시설은 제가 1년 넘게 뭐 이 시설 저 시설 살아봤는데……. 다른 시설은 모르겠는데 가정폭력은 일단 맞고 살았잖아요. 항상 내가 피해를 받았어. 그러니까 자존감 자체가 바닥이고 결정할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안돼요. […] 이게 하루만 맞아도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매일 맞고 살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요, 정서적으로. 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속 카운셀링하고 계속 잡아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다른 평범한 한부모는 모르겠어요. 근데

9) 이 시설의 경우 서울이 아닌 지방의 쉼터임.

가정폭력 시설은 그 피해여성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판단을 못 해요. [...]

제가 만약에 그 시설을 거치지 않았고, 제가 스물여덟에 아이를 낳고 그냥 어디 뭐 방 한 칸 얻어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왔다면, 저는 그런 치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결핍 상태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치유를 받고 어떤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조금 건강한 마인드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사례 A-3>).

5)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보니,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이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한 경우, 쉼터 이후 자립을 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모자원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한다. 자립에 필요한 주거 정보, 일자리, 돌봄 지원 등 모든 서비스가 모자원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근데 그 징검다리가 모자원 말고는 없어요. 물론 쉼터에 있을 때 그런 자체적으로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짜낸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지만 쉼터 자체의 실무자들도 그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시설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시설에서조차 모자원 외에는 정보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시설에서 퇴소를 하고 내가 모자원으로 가게 되면 당장 근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쨌든간에 긴급복지를 받던지 기초생활보장을 받던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정보가 없었고. [...] 그러니까 모자원이 원스톱시설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원스톱시설처럼 모두가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구조가 짜여있잖아요(<사례 A-2>).

<사례 A-6>도 모자원에 거주하면서 돌봄과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 지역의 다른 기관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러자 기관에서는 “모자원 있잖아요?”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의아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반응은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종사자에게도 모자원이 한부

모가족 대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정작 <사례 A-6>을 비롯하여 다른 한부모들은 모자원에 사는 동안 별도의 서비스 정보를 받지는 못하였으며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해야 했다는 점을 계속 얘기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 모자원에 있으면 다른 복지시설에서 다 그냥 손을 봐요. 왜냐면 모자원에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자원 있잖아요. 모자원에서 지원 안 받으세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복지관 갔을 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이 사람들 대체 뭘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서 다 지원받잖아, 왜 여기까지 왔어.’ 이거예요 (<사례 A-6>).

면접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적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한부모들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물품과 후원 등이 실제로 도움이 되며 그와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더 많은 지역사회 거주 한부모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이용시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근데 생활시설은 사실……. 저는 그 이용시설. 왜냐면 생활시설은 이게 들어갔을 때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엄마들의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인권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게 투명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너무 투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용시설이 더 많아져서 이런 정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더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용시설에서 엄마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이용시설에서 지원을 좀 더 해주면. 연계를 좀 더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더 크게 들긴 해요(<사례 B-4>).

부자시설에 거주했던 <사례 B-2> 역시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를 생활시설에서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성 한부모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웠던 <사례 B-2>은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생활인들과의 교류로 인한 만족감도 매우 컸다.

생활시설에서는 상처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상처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프로그램이라던지 각계각층에서 시설에 와서 심리적 치료, 그런 교육 같은 것, 긍정적인 방향 같은 거 제시하고. 이러한 생활시설이 모태가 돼서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생활시설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생활시설을 거쳐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 이런 생활시설은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사례 B-2>).

<사례 B-2>은 시설에 거주했던 시기가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시기였다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부자가정 지원 서비스는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야기하였다.

부자시설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최근에 40대 가장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시설들을 알고 있었으면 과연 자살을 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사례 B-2>).

면접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경험, 주변에 여전히 모르고 있는 동료 한부모들이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사례 B-2>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홍보를 우편물로 일괄 발송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근데 그걸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라고 우편 발송하는 것처럼 한부모가족한테 입소하라고 홍보했으면 정원이 좀 차지 않았을까. 지금 돈도 우리는 다 안 주지만, 거기 집합시설이 있다고 나중에 나가시더라도 좀 주거나 이런 게 안정이 되잖아요(<사례 B-2>).

<사례 C-2>는 주변에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이상한 곳”으로 오해하고 있는 한부모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공공서비스 홍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아는 지인이 한부모이신데 여기를 몰랐어요. 저보고 카페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한부모카페가 되게 많아요. 이상한 곳 많은데 거기에는 이제 돈을 내야하고 지원금을 내야 활동을 하고 등급을 매기는 그런 곳만 알고 계셨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곳 같고 공무원이신 것 같다.’ 그런 곳을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이혼할 때 짬에 검색을 해서 상위에 떠서 알았다고. 잘 모르세요(<사례 C-2>).

특히 많은 한부모들이 동주민센터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한부모가족 관련 정보 및 지원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앙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당자가 알지 못하다 보니 개별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서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공무원은 못한다, 무조건 안 된다, 안 해주는 공무원도 있고 어떤 공무원은, 정말 우리가 얘기 하는 게, 잘 만나면 담당을 잘 만나면 이것저것 지원도 해주고, 챙겨주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거죠. 저도 똑같은 관악구인데 이 동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랬고, 이 동에서는 ‘아, 그런 상황이나.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이야기를 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담당을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사례 B-4>).

<사례 A-6>은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동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들보다 한부모가족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즉 실제 서비스 및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공무원에게 역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알아봐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절대 우리나라는 알려주지 않고. 제가 정보를 얻어서 주민센터를 가요. 몰라요, 직원들이. 미치겠어요, 진짜. 제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발 공고문이 뜨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사를 해야 돼서,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전세임대의 80% 정도는 지원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고. 나머지는 8천만 원 정도를 빌려줘요, 이자를 받고. 근데 서울에서 8천만 원짜리 전세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제일 싼 데 봐도 1억 3천이었어요. 나머지 돈은 제가 이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다가 ‘나는 가장이다’라고 오백만 원 무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좋다. 주민센터 바로 달려갔어요. ‘저 이거 나는 가장이다 신청하려고…….’ 하면 ‘네? 그게 뭐예요? 나는 가장이다? 예?’ 하, 그 사람 많은데서……. ‘어머니 뭐라고요? 나는 가장이다?’ 정말 미쳐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오백만 원 대출해주는 거.’ 하면 ‘아, 잠시만요.’ 그럼 그때 찾아봐. ‘아, 이건가?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네.’ 막 짜증이 나오. 막 뽑아요, 그때 되서 몇 장, 막 열 장 뽑아요. 자기들이 막 봐요. 이거 적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막 구청에 전화해. 내가 정책을 알고 찾아가서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알아봐 주세요. 공고 확인해주세요. 신청할 거예요, 나 신청하게 해주세요.’ 부탁하고 사정해야 돼요, 지금(<사례 A-6>).

6)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

(1) 최소한의 자립 비용 확보를 위한 탈수급 유예기간 필요

면접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지원시설의 서비스가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활시설에 머무는 동안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가 집중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주거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주거 공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퇴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자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의 70%를 저축하는 경우 수급자 선정 소득에서 공제해 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주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자녀 양육 및 일상생활은 후원 물품을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이다. <사례 B-1>은 이와 같은 일종의 유예 기간이 생활시설 거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부모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차피 여기서 나가야되잖아요. 자립을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부모 기준이 주어졌으면 130,140 벌더라도. 그러면 시설에서 3년간 봐주잖아요. 봐주는 것처럼 자격이 됐으면 사회에서도 내가 뭐 2,300을 벌든 내버려 두고 돈 모을 때까지 나중에 3년 뒤에 감사를 하는 거야. 국세청에 다 뜨잖아요. 그럼 거기서 떨어지나 마나 냅두고 돈 모을 때까지는 그냥 봐줘야지. 조금 소득기준 만원만 올라가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격을 얻으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시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계속 돈 모으면 한부모시설에 안 있더라도 자립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니까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인큐베이터, 그 역할을 좀 해줘가지고. 솔직히 요즘에 어

딜 나가도 최소 임금 정도는 벌짚아요, 180정도는. 근데 한부모 기준은 13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두 달 해서 감사 나와 가지고 몇 개월이면 떨어져요. 그래서 자격을 얻으면 3년은 좀 뒤라. 그래서 그 후에도 내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떨어뜨릴 수 있는 거짚아요 (<사례 B-1>).

<사례 A-3> 역시 최저임금에 준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닌 현재의 빈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법정 한부모가 되는 게, 최저생계비가 182만 2,480원인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70 얼마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한부모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게 170 얼마일 건데. 그러면 한부모가 일단은 양육비를 주는 사람은 제가 근처에 다 찾아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짚아요, 아이를 양육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런데 일을 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18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70 얼마로 법정 한부모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낮은 그런 돈을 벌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정책 같아요. 그래서 아니 170도 그래요, 많다 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이한테 드는 돈, 또 어떤 집단 살림, 공과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미래를 위해서, 한부모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짚아요. 그 돈 가지고 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에서 벗어나면 탈락. 그냥 일반인이예요(<사례 A-3>).

<사례 B-4> 역시 돌봄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의 특성상 빈곤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일과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현재는 ‘자립’보다는 지원 대상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원가족 또는 비양육 부모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부모들에게 국가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자립 전망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망에 머물게 하는 제도적 한계는 많은 한부모들이 지적하였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양육수당을 안 받는 한부모들은 지원 폭이 더 좁아요. 한부모 증명서가 안 나오는 한부모들은 지원 폭이 너무 좁아서, 가령 후원받을 수 있는 데가 한부모지원센터

라든지 미혼모협회라든지, 이런 데 밖에 없어요. 홀트 이런 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지원을 조금 더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임대를 신청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비를 신청을 받던 이런 것들에 대한 폭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돌봄부터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 폭이 좀 더 넓으면 이 엄마들도 어쨌든 자립을 조금 할 수 있을 텐데(<사례 B-4>).

<사례 B-4>의 인용문에서도 보듯이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소득의 일정 부분을 한부모 자격 기준 판단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자산 축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나 퇴소 이후 자립정착지원금 제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는 생활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거주 한부모에게도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 주거가 제일 크다고 봐요, 사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급여 같은 거. 그러니까 지원받을 때 한부모 수당이라든지 한부모가 지원을 받았을 때 보통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할 때 지금은 다 무상급식이고 무상교육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다들 어려운 거죠. 이게 돈을 얼마 이상을 벌면 이 지원이 다 끊겨버리는 상황들이 다들 어려운. 그게 제일 고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예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 B-4>).

(2) 집중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지원 강화: 장애 질병 등

한부모의 경우 자립을 위해 취업과 일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녀가 어리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거나 한부모 본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사례 C-8>은 이혼 후 암수술 이후 본인의 건강과 사춘기 자녀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 시기를 "암흑기"로 표현하였다.

(연구자: 이플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때도 힘들었어요. (울음). 아이들이 사춘기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아파도 저를 배려하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암진단을 받으니까 다운되더라구요. 암흑기였어요(<사례 C-8>).

중증 질환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례 C-9>는 본인의 건강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아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는 주양육자인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돌봄의 공백을 넘어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도 쉽지 않다.

생리통 심해가지고 허리 끊어질 것 같아도 허리 부여잡고 병원 데려가고 애 치료하는 데 데려가고. 오늘도 이따가 치료 가요. 코로나가 4단계여도 어쨌든 애 치료는 빠지면 다시 2,3개월 또 기다려야 되니까. 저도 요즘에 허리 치료받으러 다니고요. (연구자: 허리 치료받을 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요. 주사만 맞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주사만 받고 물리치료는 따로 못해요. 근데 재작년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아이] 면회 다니면서도 또 산후조리 안 하고 알바하러 다니고 그랬어요(<사례 C-9>).

건강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일과 돌봄을 혼자 수행해야 하는 한부모의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사례 A-6>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긴급 돌봄의 경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일만 하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생활시설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원가족 및 비양육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므로 생활시설 운영 측면에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자립을 위해서 돌봄을 조금 더 해주는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필요하죠. 제일 필요하죠. 그게 일 번이죠, 일 번.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막 어린이집을 보내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더라도 차가 막힌다, 뭐 회식이다, 그러면 뛰어와야 돼요. 애가 어린이집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깐. 어린이집에서도 요즘에는 돌봄을 오래 안 해주려고 해요. ‘어머니, 다 가고 애만 남아가지고.’ 데리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가고 있어요.’ 빨리 빼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벅차요. 두 명이서 부모가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키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어머니.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주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애는 없어. 그러니까 모자원이면 애랑 엄마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일만 하래요(<사례 A-6>).

(3)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으나 실제 한부모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은 많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 교육의 경우, 소비 내역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와 관련된 경제 교육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젊은 한부모 여성들의 경우 자기계발과 관련된 교육, 여성인권 및 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고 쳐서 애를 낳아서 아빠가 없어, 이런 기분이거든요? 여기는 계획했는데, 계획임신을 해서 서로 결혼을 하고 하다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한 건데, 여기는 둘이 그냥 사귀다가 좋아서 사고쳐가지고 애 낳고 아빠 없어. 이런 기분인 거거든요? 그런 인식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사례 B-4>).

사회에서 바라보는 '미혼모'에 대한 낙인과 차별적 시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설에 거주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차별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여성 한부모들의 외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외부 강사 초빙 교육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표현들, 관리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무시와 차별이 시정될 필요가 있으면 이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양육자가 혼자인 한부모의 경우 자녀와 소통이 어렵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풀어갈 수 있는 중재자가 없어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통해 아이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 같은 기회는 한부모 자녀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포럼. 엄마랑 같이. 아이들 주장보다는 아이들의 생각이 담긴 발언의 장을 열어줬으면 해요. 왜냐면 엄마가 크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크는 거죠. 그런 장을 같이 엄마랑 공유를 하면 엄마랑 1대 1 대화를 안 해도 엄마 생각을 아이가 알 수 있어요. [...] 엄마랑 아이랑 대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자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생각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낳았고. 근데 아이들만 가서 교육을 받으면 엄마 생각 알 수 없잖아요. 거기서 끝나요, 그냥. 지식에서 끝난다고. 근데 엄마랑 같이 하면 엄마에 대한 감정을 눈빛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거를 알거든요(<사례 B-3>).

7) 한부모 당사자 조직화 및 네트워킹 지원

(1) 자조모임 및 멘토 프로그램 강화

한편 한부모 당사자 조직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한부모 조직 가시화를 비롯하여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한부모 모임 또는 단체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자조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 나눔을 비롯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는 한부모도 있었다.

<사례 B-2>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패턴에 맞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화로 발전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공동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 있는, 협동조합처럼 해주면……. 왜냐면 지금 다 직업이 다르잖아요. 우리 시설에도 각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모자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통장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다면 아이를, 7시에 퇴근하거나 8시에 퇴근하거나 그러면 시설에 낮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밤에 들어오는 사람 그런 부분이 사라지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그리고 같이 유대감도 쌓고 교육도 같이 가고 모임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면 서로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사례 B-2>).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부모가족 자녀들끼리 서로 멘토가 되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높았다. <사례 A-6>은 생활시설에 거주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아이들끼리 만난다면 같은 또래로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좋은 거는 거기 퇴소자들 애들이 크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크지만. 그런 애들이랑 멘토를 시켜요. 멘토를 시켜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드민턴 대

회를 열어요. 그러면 개네들이 와서 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잘 큰 아이들이 와서 멘토를 해주니까 좋은 영향.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도 계속해서 저렇게 봉사하면 참 좋겠다, 도와주면 참 좋겠다. 뭐 자기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 환경을. 그래서 조언해줄 수도 있고. ‘너 공부하는 것 좀 어때?’ 같은 또래로서 얘기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사례 A-6>).

(2) 한부모의 쉼과 여가생활 지원

면접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서 지원시설에서 조직한 문화생활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애 처음으로 연극과 뮤지컬을 보았고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인문학적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었으며 한부모로서의 당당함을 키울 수 있었다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저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부모들 여가생활.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저는 됐어요. (연구자: 뭐 지원하셨어요?) 호텔. (연구자: 아, 호텔. 옛날에 광에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호텔 지원 돼서 가는데 그것도 저소득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 한부모도 갈 수 있게……. 조금만 벌면 그런 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 사유 없어도 다문화는 해줘요. 놀이동산도 가고 그러거든요? 너무 이게 편중돼 있으니까 힘들어요(<사례 B-3>).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이거나 한부모 자신이 질병이 있는 가족에게 일과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운 휴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면접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에서는 현재 돌봄 지원 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쉼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당사자도 있었다.

3. 요약 및 시사점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지원시설의 서비스가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활시설에서 머무는 동안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가 집중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의 중요성은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한부

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나 생활시설이 주거 공간을 제공할 뿐, 장기적인 주거 대책을 위한 정보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개별 가구 상황에 맞춘 적극적인 주거 정보를 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향후 한부모 당사자들이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교육이 필수인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생활 침해 부분에 있어 모자원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독립적인 주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였다. 가스 검침 및 방역 등의 이슈로 방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지만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가정생활에 대한 간섭과 평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편에서는 관계자들이 아동학대를 빌미로 통제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면접조사에 의하면 한부모들의 취약함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무시와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들은 정기적으로 경제활동을 보고해야 했는데 소득과 저축 금액뿐만 아니라 통장 내역 및 카드 명세서, 임금 내역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시설에 입소한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보호받고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타자화되어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부모의 삶이 질이 보장되기 위해서 ‘주거만 안정된다면’이라는 말을 하나같이 이야기했다. 생활시설을 이용한 한부모들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지만 시설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의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이 확대되는 것을 선호했다. 또한, 일반적인 임대주택 확대와 동시에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안전한 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은 미혼모기본생활시설을 이용했던 한부모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 역할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미혼모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출산만이 아니라 아이 돌봄의 부

분에 있어서도 아이가 아픈 경우에는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시설 내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한부모들에게 동일한 요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한부모에게는 시설에서의 경험이 이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가정폭력으로 시설을 찾아온 당사자에게 시의적절한 서비스들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보니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이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면접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보편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정보나 지원을 요청했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어 당사자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직접 알아보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부모가족만을 위한 지원을 홍보해줄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정보 제공에 있어 분산된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채널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자립을 위한 의견들도 있었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의 경우, 근로소득의 70%를 저축하면 수급자 선정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이와 같은 일종의 유예조건이 생활시설 거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부모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이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이 아닌 현재의 빈곤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부모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요건이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자녀가 어리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시설 운영 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생활시설

에 거주하는 동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으나 실제 한부모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은 많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면접조사 참여자는 경제 교육 같은 경우, 소비 내역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와 관련된 교육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부모 조직 가시화를 비롯하여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부모 모임 단체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면접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서 지원시설에서 조직한 문화생활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 지원에 있어 단순히 주거와 자립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부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V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 방향
2.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관련 세부 과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 방향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한 명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한부모의 성별, 연령, 가구 특성 등 매우 다양한 그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과 서비스는 이 같은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현재 생활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한부모 당사자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주거 서비스의 확대 강화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생활시설은 일반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한부모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집중 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서비스에는 임신·출산기에 원가족 및 배우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의 건강 및 돌봄,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건강 및 돌봄, 한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질병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비혼출산, 이혼,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기존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이다. 또한 주거서비스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관련 세부 과제

1) 한부모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 (확대·강화) 한부모가족 이용시설 확충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개선만으로는 한부모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서울시 한부모가족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시 전체 한부모 가구 31,704가구 중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은 6,886가구이며, 이 중 시설 보호 대상 가구는 시설보호 대상은 86가구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시설 확충보다는, 지역사회 거주하는 한부모가 이용 할 수 있는 이용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이용시설은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한부모 자조모임 확대 등 지역 거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미혼모에 초점을 맞춘 지원시설이다보니, 이혼 및 사별을 경험한 한부모가족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용시설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이용시설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서비스로는 주거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지역사회 한부모 자조모임 강화 등을 제안한다. 현재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주거지원 및 복지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별 주거 서비스 공급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조모임은 신규로 추진되는 서비스 및 물품 후원 등의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인 동시에 한부모들의 일상적인 경험 공유 등을 통한 자존감 회복의 역할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는 서울시 한부모 자조모임 리더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활동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자조모임은 한부모가족들의 의견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화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확대·강화) 한부모가족 원스톱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

한부모가족 원스톱 지원을 위해 자치구별 한부모가족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는 한부모의 상황 및 아동 연령,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 및 돌봄 수요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필요로 한다. 주거, 신체적·정신적 건강, 일자리, 한부모 및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들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는 담당 부처에 따라 분절되어 제공되고 있어 한부모 입장에서는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와 같은 동료 상담 인력을 활용하여 일정부분 해결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규모의 사업만으로는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면접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한부모들은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동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관련 정보를 집적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부모가족 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정보를 한부모 당사자의 수요에 맞게 계획할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하는 적극적인 업무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신규) 의료·건강 전달체계와의 협업 제도화

현재 한부모가족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와 한부모가족 지



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부모 중에서도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부인과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례가 있었다. 배우자 및 원가족의 지지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비혼 출산 한부모들의 경우, 임신기에서부터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출산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이 고립의 시기는 향후 한부모 여성의 자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만큼 공공의 서비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에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이용하는 병원 및 약국을 통해 모든 여성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면접조사에서도 산부인과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병원을 이용하기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임신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한 안전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1) (개선) 한부모 지원 서비스에 따른 시설 유형 구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한부모의 혼인 경험에 따라 구분되기 보다는 한부모의 정책 수요에 따른 것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미혼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분되어 있어 시설 이용에 있어 혼인 경험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론 현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의 경우에 비혼 출산 여성뿐만 아니라 이혼·사별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임신 및 출산 지원보다는 미혼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안내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재구성된다면 임신·출산기 한부모 지원시설,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한부모 지원 시설, 장애 아동 돌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확대·강화) 일시긴급지원시설 확대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에서 일시긴급지원시설은 서울시에 1개소만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폭력피해를 경험한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과 돌봄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3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이용할 수 있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이용기준을 미혼모에 국한하기보다는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한부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한부모와 아동의 치유와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 시설 및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한부모가족 주거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1) (개선) 한부모가족 주거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본 연구 결과, 한부모가족의 주거정책 수요는 모든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수요는 지금과 같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은 현재와 같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확대보다는 주거복지 서비스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 기존 주거복지정책은 한부모가족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지원 기준에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로 자녀연령 기준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주거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신규) 한부모가족 지원주택 신설

현재 서울시 주거복지 차원에서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는 의료취약계층, 여성, 1인 창조기업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 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심주택은 복지서비스 연계형 주택으로 의료시설 인근에 건설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체 주택 및 공공주택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주거공동체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과는 차별화된다.



【 표 V-1 】 수요맞춤형 주택 유형 및 내용

구분	내용
의료 안심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과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심주택 :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복지서비스 연계형 주택: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의료시설이 인근에 건설되어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
여성 안심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 여성의 안전과 생활 유형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여성에게만 공급 -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 : 1인 여성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과 편리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주거유형, 무인택배시스템, 24시간 비상벨 등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하여 설계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1인 창조기업인에게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비용으로 공급해 기업의 성장기반을 일구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 -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 창업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연계지원, 기술 및 경영자문, 시설인프라 지원 등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이 제공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들이 주거공간을 통하여 예술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수요자 맞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희망 하우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임대 -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음
지원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거 생활을 해야 할 경우 그런 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과 더불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사회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해 지원
공동체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이 있고 고민하는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인 공동체들이라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맞춰 주거가 특화될 가능성이 큰 주택

출처: <https://www.seoulhousing.kr/html/0101015.do>

이 중 지원주택은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서,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노인

을 대상으로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주택 입주 자격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모든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는 외부 지원이 필요한 장애 및 질병이 있는 한부모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용 자격을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V-2 지원주택 유형 및 내용

구분		내용
정의		-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거 생활을 해야 할 경우 그런 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과 더불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입주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신청 자격	장애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노숙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관리기록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노숙인 생활시설(재활·자활·요양)에서 총 1년 이상 거주한 노숙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숙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정신 장애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단, 정신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 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 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인 지원등급자(등급판정서류 제출) 2.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진단서 제출)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숙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유자 또는 보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입주지원 및 상담, 시설관리 지원, 주거유지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
자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1,550만원 이하(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3,496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출처: <https://www.seoulhousing.kr/html/0101015.do>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이용시설 및 서비스 확충이라는 큰 방향성과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는 당사자 설문조사, 면접조사, 시설장 서면조사 등 모든 조사 결과에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 연구(김승희, 2018a)에서도 주거 공간과 개별 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의 방식보다는 정주기반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즉 한부모가족에게 교육, 양육, 복지, 돌봄 등의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각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단순히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시설장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단순한 기간 연장이나 혼인지위에 따른 구분보다는 한부모들이 놓여 있는 문제에 집중한 지원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Abstract

Study on Improvement Plans
in the Operation of the Public Support Facilit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Lee, Sun Hyoung

Department of Policy Research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This policy report aims to find the improvement plans in the opera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for the single-parent families. The facilities for the single-parent families consist of two types: communal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ose families having housing insecurity and service providing facilities for their better quality of life in Seoul. Lately, the number of users of communal residential facilities has decreased, but the demand for service providing facilities has been increasing. However, indeed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has only one single-parent families support center as a service providing facilities, so it is a timely need to review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n single-parent families support facilitie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and interviewed facility's chair persons and single-parent families using the public facilities in Seoul. The survey of the service users includes several questions; service evalu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time of use of the facility, and functions and roles of facilities that users are expecting in the future. The survey for the facility chair consists of service evaluation, current facility services and its difficulties, functions and roles that facilities are expecting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the study, this study finds that many single parents want to expand residential services that can accommodate each household separately rather than current communal living facilities. In addition, service users highly demand for public medical support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intensive care for disabled family members, and better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facility management from service users' view point. In the survey result of the head of the facility, they say that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public support facilities' functions and roles and also develop single-parent customized services.

Reflecting the research results, this report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tion of single-parent families support facilities in Seoul, re-establishing the functions and roles of support facilities is necessary. Also this report proposed that living facilities should strengthen the provision of intensive support services consider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ingle-parent families rather than existing programs that mainly focus on offering communal residential spaces. For a stable residential space that most single-parent families want,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needs to expand residential services for single-parent families overall and provide multiple residential options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that each family faces. In addition, this report proposes to expand services in support facilities to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residential services for single-parent families and broaden peer group meetings for single parents in the local community. Furthermore, to improve the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for single-parent families, this study proposed to increase the service personnel for better integrated support and institutionalize cooperation with the medical and health care support network.

Keyword: single-parent 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support facilities, single-parent families support policy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deinstitutionalization for independent living, human rights violations, public residential service for single-parent families.

▶▶▶ 참고문헌

- 강은애(2020).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강혜규 외(2016). 『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길현중, 이영수(2017).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대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남희(2021). 「안전하고 행복한 시설이란 없다-코로나 시기 탈시설 운동의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268), 19-22.
- 김순남(2020). 「강제된 장소, 강제된 관계를 질문하는 탈시설 운동」, 장애여성 공감 엮음, 『시설 사회』. 와온.
- 김승희(2018). 「한부모가족 지원실태와 지원방안 - 미혼모 가족을 중심으로」, 『미혼모 주거 복지 필요성과 개선방안』, 2018. 9. 5. 토론회.
- 김승희·이한나(2018). 「한부모 가족 형성과정에서 주거상태 변화와 주거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6(4): 167-188.
- 김영정(2017).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돌봄 및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은지 외(2019). 『한부모가족지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호수(2020). 「해외입양과 미혼모, 그리고 한국의 정상가족」, 장애여성 공감 엮음, 『시설 사회』. 와온.
- 박숙경(2021). 「탈시설 이념 및 지역사회 거주 권리에 관한 논의」, 『월간 복지동향』, (268), 5-10.
- 박은철 외(202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 위한 배분체계와 임대료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서울주택도시공사.
- 성정현 외(2017). 『한부모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송다영(2012). 「젠더레짐을 통한 여성사회권의 현실과 지향성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제3권1호, 71-96.
- 송이은(2018). 『다양한 가족구성원 건강 지원체계 마련 연구: 서울시 한부모 가족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오문준 외(2020). 『서울형 사회복지시설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오진방(2020). 「한부모, 장소가 만들어 내는 차이: 탈시설에서 답을 찾다」, 장애여성 공감 엮음, 『시설 사회』. 와온.

- 오진방(2020). 「반복되는 일가족의 죽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월간 복지동향』, (257), 38-41.
- 유정원 외(2018).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경기복지재단.
- 이미정 외(20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기능화에 따른 운영모델 재정립 등 연구』, 여성가족부.
- 이선형 외(2020). 『제 2차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선형(2018). 『가족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선형(2020). 『서울시 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한나, 김승희(2018). 「한부모 가족 형성과정에서 점유형태 변화와 시기별 특성 분석」, 『주거환경』, 16(4), 41-55.
- 이혜정, 송다영(2020). 「이혼한 한부모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여성학』, 36(2), 109-152.
- 장명선, 이영호(2020).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 :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2(2), 175-218.
- 조애저(2004). 「모자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원.
- 조애저(2004). 「혼인형태의 변화양상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91(0), 33-50.
- 황정미(2001). 「여성 정책과 젠더 정치 (gender politics): 복지 국가 및 후발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 75-113.
- 황정임, 이호택 & 김유나(201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191-223.

부 록

1. 설문지(시설장용)
2. 설문지(당사자용)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1] 설문지(시설장용)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시설장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여성, 가족, 영유아 보육, 아동·청소년 관련하여 다양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 가족담당관 요청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 운영 현황 및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자의 개인정보나 응답내용은 모두 비밀로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6월

| 연구 주관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사수행 및 문의 : 이선형 (02-810-5025, shlee@seoulwomen.or.kr)
기나희 (02-810-5420, tjsgy12@seoulwomen.or.kr)

깨끗하고 투명한 일 처리로 청렴재단, 청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응답자 특성

P1. 시설 유형	생활 시설	<input type="checkbox"/> ① 모·부자 기본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② 모·부자 공동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③ 미혼모 기본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④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⑤ 미혼모 공동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⑥ 일시지원 복지시설
이용 시설	<input type="checkbox"/> 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②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input type="checkbox"/> ③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④ 사회복지관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3.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는 외부인력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3-1. (① 응답 경우) 외부인력의 인원 및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구분	인원(명)	주요 업무
법인 지원 인력		
사회복무요원		
서울시 및 자치구 일자리 (뉴딜, 인턴 등)		
자원봉사자		
기타()		

4.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에서 도입하고 계신 제도와 현황에 대해서 응답해주시십시오.

구분		도입((○, X)	활용(○, X)
유연 근무	시차 출퇴근제		
	재택 근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교대제	주간2교대, 3조 2교대 등 모두 포함		
당직 근무	22시 이후 근무		

5.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 종사자의 근로 현황입니다. 근속연수가 가장 오래된 직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당직 근무	휴일근로	초과근로
횟수 (없으면 0회)	지난 한 달 () 회	지난 한 달 () 회	지난 1주일 동안() 회

6.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규모의 시설에서도 주52 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에서는 이 제도 도입 및 실행과 관련하여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7.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까?
(ex. 고충처리위원회 등)

- ① 있다. ② 없다.

7-1.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예) 다양한 고충 처리 어려움 등

8.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인력과 관련한 어려움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지원시설 운영 인력의 어려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업무에 비해 인력 수가 적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업무에 비해 인건비 수준이 낮다.					
③ 인력의 전문 역량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인력의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 의견)					

B.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평가) 아래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형별로 제시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비교란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서비스 유형	유무 (O, X)	비고
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		
②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정보제공		
③ 본인 또는 자녀 상담, 치료(개인 및 집단 상담)		
④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아이돌봄서비스, 학습 지원 등)		
⑤ 한부모 당사자 교육 지원(학력 인정, 일자리, 자활 등)		
⑥ 한부모 당사자 신체 건강지원(의료비, 건강검진 및 운동 등)		
⑦ 한부모 당사자 사회적 관계망 강화(자조모임 등)		
⑧ 기타()		
(귀하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의견)		

※11-1 ~ 11-3 문항은 11번 문항 보기 이용하여 응답

11-1. 위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11-2. 위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11-3. 위 서비스 중에서 가장 확대가 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12. 귀하께서는 현재 지원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서비스 제공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어려움(교육, 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② 양질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음(주거, 상담, 물품 등)	①	②	③	④	⑤
③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어려움(교육 및 놀이 등)	①	②	③	④	⑤
④ 당사사 프로그램 이용시 자녀 돌봄 공백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⑤ 취업 한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간 어려움(아간, 주말 등)	①	②	③	④	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 의견)					

13. 귀하께서는 향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제공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생활시설보다는 주거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재가 한부모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서비스 개발에 한부모가족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 의견)					

14. 귀하께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아래 평가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서비스 제공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생활시설은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이용시설은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이용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생활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생활시설은 단기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종합적 의견)					

15. 귀하께서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
- ② 단기간 긴급 보호 주거 서비스 제공
- ③ 교육·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④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학업 및 취업 등)
- ⑤ 자녀 돌봄·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 ⑥ 현금 및 물품 후원 서비스 연계
- ⑦ 기타(_____)

C. 한부모가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16. 귀하께서는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개선
- ② 한부모 당사자의 자립 지원
- ③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
- ④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
- ⑤ 자녀 연령별 돌봄 서비스 다각화
- ⑥ 한부모 자조모임 및 단체활동 활성화
- ⑦ 한부모가족 대상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⑧ 기타(_____)

17.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부록2] 설문지(당사자 용)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가족담당관 요청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설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관련 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개인 자료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사의 예상 소요시간은 약 15~20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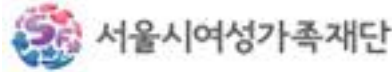
설문 완료 후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로페이 상품권(5,000원)'을 제공해드립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책임자: 이선형 (02-810-5025, shlee@seoulwomen.or.kr)

위촉 연구원: 기나휘 (02-810-5420, tjsgy12@seoulwomen.or.kr)

함께해요 청림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기 및 설명>

*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근거한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 생활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 및 기본생활 모·부자 기본생활,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 이용시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Q6. 귀하께서 받은 서비스가 귀하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정서적 치유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④ 자녀 돌봄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⑤ 본인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⑦ 멘토 및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Q7. 귀하께서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
- ② 단기간 긴급 보호 주거 서비스 제공
- ③ 교육·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④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학업 및 취업 등)
- ⑤ 자녀 돌봄·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 ⑥ 현금 및 물품 후원 서비스 연계
- ⑦ 기타(_____)

Q8. 귀하께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생활시설보다는 주거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재가 한부모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서비스 개발에 한부모가족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Q9. 귀하께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아래 평가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생활시설은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이용시설은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이용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생활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생활시설은 단기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Q10. 귀하께서는 지원시설을 이용하시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항 목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				자주 경험 했다.
①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 및 행동(폭언 및 폭행 등)	①	②	③	④	⑤
② 원하지 않는 종교활동 강요	①	②	③	④	⑤
③ 사생활 침해	①	②	③	④	⑤
④ 이용 당사자 의견 수렴 부재	①	②	③	④	⑤
⑤ 물품과 서비스 불공평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Q11.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입니다.

(모자기본생활시설, 부자기본생활시설, 부자공동생활시설,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 미혼모
자공동생활시설, 미혼모공동생활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귀하께서는 위 시설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대체로 모른다.
③ 대체로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Q12. 귀하께서는 미혼모와 한부모가 거주하는 시설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Q13. 귀하께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거주하는 시설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공통 질문

Q14.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이혼 ② 이혼 소송 중 별거 ③ 가정 폭력으로 인한 별거
 ④ 사별 ⑤ 비혼 출산 ⑥ 기타()

Q15. 한부모가 되는 과정을 기준으로 볼 때, 귀하께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① 한부모가 되는 과정(ex. 이혼, 사별 비혼 출산 전후 시기 등)
 ② 한부모가 된 지 1년 이내
 ③ 한부모가 되고 1년 ~ 3년 이내
 ④ 한부모가 되고 3년 이후

Q15-1.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택해주시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정서적 불안 및 우울 ② 경제적 빈곤
 ③ 자녀 돌봄 및 교육 ④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대한 걱정
 ⑤ 원가족 관계 단절 ⑥ 사회적 관계 단절

Q15-2.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가장 도움이 되셨던 방법을 우선순위로 2가지를 택해주시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봄
 ② 친구·가족에게 도움을 청함
 ③ 공공 기관에 도움을 청함(구청 및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생활시설 등)
 ④ 민간 기관에 도움을 청함(한부모가족 관련 시민단체, 상담소 등)
 ⑤ 아무것도 하지 못함

Q16.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귀하께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
 ②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③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④ 자녀가 대학교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Q20. 귀하께서는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개선
- ② 한부모 당사자의 자립 지원
- ③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
- ④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
- ⑤ 자녀 연령별 돌봄 서비스 다각화
- ⑥ 한부모 자조모임 및 단체활동 활성화
- ⑦ 한부모가족 대상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Q21. 귀하께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이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모른다.

Q21-1. (① 응답자) 귀하께서 받고 계신 지원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생계 급여
- ② 의료 급여
- ③ 주거 급여
- ④ 교육 급여
- ⑤ 자활근로장려금
- ⑥ 아동 양육비(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 ⑦ 아동교육 지원비
- ⑧ 생계비(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⑨ 청소년 한부모 지원(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 포함)
- ⑩ 기타 ()

2021 정책연구 - 05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발행인 정연정
연구책임 이선형(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기나휘(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연구원)
발행일 2021년 9월
인쇄처 (주)행복드림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전화 02-810-5101(대)
발간물등록번호 51-B552561-000068-01
I S B N 979-11-91139-51-8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www.seoulwomen.or.kr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